

월간

나라재정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2020. September
Vol. 45

9



재정 INSIGHT

KPFIS 인사이드
재정칼럼
툇아보기

재정 NOW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
키워드 재정
해외재정동향

재정 STORY

이달의 재정 이야기
재정 Talk Talk
미술관에 간 경제학자
재정 캘린더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Contents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ptember, 2020
VOL. 45

월간

나라재정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전화 02-6273-0500

팩스 02-6312-8959

홈페이지 www.kpfis.or.kr

발행인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

문의 재정정보분석본부 | 02-6908-8593

제작 경성문화사 | 02-786-2999

재정 INSIGHT

04 · 특별기고

재정혁신으로 재정의 효과성·지속가능성 높여야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08 · KPFIS 인사이드

- 교육 분야 통합재정 통계 작성 방안 검토
나원희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
- 「2021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 방향
지은초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
-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정성호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위원

30 · 재정칼럼

- 2021년 예산안의 고민과 의지, 그리고 도전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 재정적자 100조원 시대의 재정관리
박형수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객원교수, 전 조세재정연구원장

38 · 톺아보기

- 2021년 예산안 주요 내용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42 · 정책 연구

- dBrain 기반 재정성과관리 지원 강화방안
-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와 경기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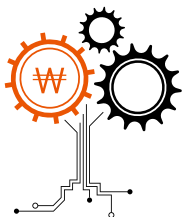
재정 NOW

- 46** •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 52** •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
- 58** • 키워드 재정
개인정보
- 62** • 해외재정동향
한국경제보고서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0



재정 STORY

- 68** • 이달의 재정 이야기
· 데이터 강국의 기반을 다지는 공공데이터포털
· 예금자를 보호하는 예금보험공사의 공공데이터
- 74** • 재정 Talk Talk
중앙정부의 재정 규모는 얼마일까요?
- 76** • 미술관에 간 경제학자
윌리엄 터너의 전함(戰艦) 테메레르,
그리고 산업혁명의 도래
- 80** • 경제철학 이야기
로널드 코스: 법경제학의 개척자
- 84** • KPFIS의 서재
- 86** • 재정 캘린더
- 88** •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재정혁신으로 재정의 효과성·지속가능성 높여야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지출 구조조정을 비롯한 재정혁신은 다들 그 필요성을 수긍하는 과제다. 요즘 처럼 나라 빚 증가속도에 대한 우려가 클 때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총론상의 찬성과 달리, 막상 ‘어느 분야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각론으로 들어가면 분위기가 달라진다. 어느 부처든 어느 자치단체든 자기 사업이 중요하지 않을 리 없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출 구조조정의 실질적 ‘정책우군’은 찾기가 쉽지 않다. 재정당국으로서는 아쉬운 부분이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제법 잘 버텼다.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극복한 것에서 보듯이, “쓸 때 쓰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잘 관리한” 편이다. 하지만 향후 재정여건은 녹록지 않다. 전례 없는 경제활동 위축으로 수입은 작년의 당초 예상치에 미달할 전망이다. 반면에 경제역동성 회복, 포용기반 확충, 안심사회 구현 등을 위한 지출소요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커졌다. 과감한 재정혁신으로 재정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하는 이유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혁신 6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유사·중복, 저성과, 집행부진 사업은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관행적으로 편성되던 출연·보조사업은 존속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평가제도를 활용한 지출구조 개선이나 부처 간 협업을 활성화해 유사·중복 예산을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실제 2021년 예산안에서 신규 토목·건설비를 줄여 디지털 트윈과 SOC 디지털화에 나선 것이나, 민간시장 활성화로 국고보조 필요성이 낮아진 플러그인차 보급 예산을 없앴 것이 이에 해당한다. 부처 간 협업예산도 9조원 이상으로 늘렸다.

둘째, 수입기반 확충이다. 기존의 비과세·감면 제도 가운데 실효성이 낮고 불요불급한 항목은 정비 대상이다. 역외탈세, 고액·상습 체납,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 등에도 적극 대응한다. 또한 기금별로 여유재원을 면밀히 분석해 회계·기금 간 재원을 조정하고, 소규모 기금들의 여유재원을 통합운용할 방침이다.



전례 없는 경제활동 위축으로 재정수입은 당초 예상치에 미달할 전망이다.
반면에 경제역동성 회복, 포용기반 확충, 안심사회 구현 등을 위한 지출소요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커졌다. 과감한 재정혁신으로 재정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하는 이유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혁신 6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셋째, 투자재원 다변화다. 특히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을 끌어오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하고, 세제·규제 등에서 우대받는 공모 인프라 펀드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3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해 민간투자 대상을 종전 53개에서 모든 사회기반 및 공공·공용시설로 바꿨다. 국유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및 생활 SOC 확충과 노후 청사·관사의 복합 개발도 확대할 계획이다.

넷째, 재정위험 관리의 체계화다. 이를 위해 인구구조 변화, 성장률 추세 등을 반영한 장기재정전망을 최근 발표한 데 이어, 이를 토대로 연금·보험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재정준칙 도입도 검토한다. 국고채 시장에선 수요 기반 확대, 만기구조 분산, 유동성 제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다섯째, 재정관리체계를 혁신한다. 우선 성과관리대상 사업을 지금의 단위사업에서 프로그램으로 상향조정하고, 평가 결과와 예산 편성 간 연계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하 dBrain)에 재정성과 DB를 구축하기로 했다. 신기술·신제품·신산업을 위해 공공구매제도와 공공계약제도도 개선한다.

여섯째,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차세대 dBrain을 통해 중앙·지방·교육 분야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국민들이 수혜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도록 맞춤형 공개를 추진한다. 국민참여제도의 연간 상시적 운영과, 각종 정책 제안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런 재정혁신을 통해 새는 돈을 줄이고, 같은 돈이라도 생산성·가성비를 높이고, 절감한 재원을 혁신·포용·안전에 재투자할 것이다. 단순히 덜 쓰자는 것이 아니라, 선도형 경제로 가기 위한 핵심 분야에 더 쓰자는 것이다. 잘 알다시피 재정은 대표적인 롱텀 분야이고 대계가 필요하다. 눈앞의 단기 재정지표 악화를 잘 관리하는 것 못지않게, 긴 안목과 반듯한 재정혁신으로 재정백년 대계를 그려나가야 한다.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혁신 방향 6가지



1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

- 지출 구조조정
- 지출구조 개선
- 협업예산 활성화

2

수입기반 확충

- 비과세·감면 정비
- 탈루소득 과세 강화
- 재원의 효율적 활용

3

투자재원 다변화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 국유재산 활용 확대

4

재정위험관리 체계화

- 중장기 재정위험 관리
- 국고채 안정적 관리

5

재정관리체계 혁신

- 성과관리제도 개편
- 국가자산 종합관리체계 구축
- 혁신지향 공공조달
- 공공계약제도 개선

6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

- 재정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공개 확대
- 국민참여예산제도 정착·확산



KPFIS-인사이트

교육 분야 통합재정 통계 작성 방안 검토¹

본고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UN의 정부 기능별 분류(COFOG)에 대해 살펴보고,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중앙, 지방, 지방교육을 통합·연계한 통합재정 통계 작성 방안 탐색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나원희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nwh2019@kpfis.or.kr)

- ¹ 본고는 2020년 발간 예정인 「중앙과 지방교육 재정정보를 활용한 정부 기능별 통계 산출방안」(2020년 연구보고서) 중 2~3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재작성한 것이다.
- ² 우리나라는 현재 GFS 기준 총지출만 발표하고 있으며, COFOG의 대분류와 중분류 등은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지 않다.

1 문제 제기

재정지출의 분야별 재원 배분은 예산 편성 및 재정정책 수립에 있어 핵심적인 주제다. 재정지출의 분야별 재원 배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현재 한국경제는 성장의 둔화, 소득분포의 악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재정의 역할과 지출구조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발표하고 있는 통합재정수지의 분야별 재정지출 현황은 중앙정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전체 수준의 재정지출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각 나라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에 따라 재정 배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타 국가와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수준을 비교하여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재정지출과 관련한 정확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내부거래를 차감한 일반정부를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일반정부 재정지출의 상대적 수준과 국제비교를 위해 OECD와 IMF에서 각각 SNA(국민계정, System of National Accounts) 기준과 GFS(통합재정,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기준의 정부 기능별 분류(Classification of Function of Government, 이하 COFOG)를 작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SNA 기준 COFOG만 발표되고 있다².

한국은행이 작성하여 OECD에 보고하고 있는 SNA 기준 COFOG는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를 혼용하여 작성되며, 정부지출 이외에 일부 수익자부담경비(학교회계 수업료, 입학금 등)가 포함되어 있어 순수한 정부지출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 밖에 OECD에

표 1. 유사 재정통계 자료 비교

구분	GFS 2001 (통합재정,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SNA 2008 (국민계정, System of National Accounts)	EAG (교육지표, Education at A Glance)
국제기구 제출	IMF	OECD	OECD
담당부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교육부
회계기준	발생주의	현금주의(발생주의 혼용)	현금주의
일반정부 포함 범위	중앙정부 ¹⁾ , 지방정부 ¹⁾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중앙정부, 지방정부
작성목적	- 정부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결과의 투명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해 IMF에서 제정	-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 측정하기 위해 UN에서 발표한 국제통계매뉴얼임	- OECD 국가의 교육통계, 교육재정 등 자료 수집·분석
차이점	수익자부담경비를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정부지출을 대상으로 하며, 지방채 미포함	학교회계의 수익자부담경비(수업료, 입학금 등) 포함	시도교육청 지방채 포함

주 1) 중앙과 지방정부에 사회보장기금이 포함(우리나라는 중앙정부에 포함됨). 대안적으로 사회보장기금은 별도로 분류할 수도 있음.
 자료: 김성자(2016), 「SNA기준 정부기능별 분류(COFOG) 산출방법과 GFS 기준과의 차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센터 오피니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9), 「알기 쉬운 재정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교육재정 조사(Education at A Glance 중 Finance 부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비에 한정하여 조사되므로 타 분야의 정부지출 규모와 함께 비교·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본고에서는 GFS 기준 COFOG 작성 방안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까지 모두 포괄하여 분석할 수 있는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COFOG에 대해 소개하고, 우리나라 교육 분야 정부지출 규모 파악을 위한 재정통계시스템에 대한 소개, 다음으로 국제 기준의 교육 분야 정부지출통계 생산을 위한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2. 국제기준 작성지침

1) 정부 기능별³ 분류(COFOG)

재정지출의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기능별 재정지출 구조를 분석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통계로는 UN에서 제정한 정부 기능별 분류(COFOG)가 있다. COFOG의 포괄범위는 일반정부 단위이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비영리공공기관이 그 대상이다. 분류체계는 세부적으로 분야, 부문 및 등급의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분야가 정부의 광범위한 목표로 보일 수 있는 반면, 부문과 등급이 이런 광범위한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설명된다(재정통계매뉴얼, 2014). 일반정부의 재정지출은 크게 ‘일반공공행정’,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경제활동’, ‘환경보호’, ‘주거 및 지역사회시설’, ‘보건’, ‘휴양·문화·종교’, ‘교육’, ‘사회보호’ 총 10개 분야이며, 각 분야별로 5~10개의 하위 부문으로 세분화되어 총 69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GFSM 2014). 그중 교육 분야는 대분류(709)에 해당하며, 중분류는 유아 및 초등교육(7091)~기타 미분류 교육(7098)으로 구분된다.

2)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 기준 적용

COFOG에서 교육 분야의 분류체계는 더욱 세분화되어 있는데, UNESCO가 발표한 국제표준교육분류(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이하 ISCED)를 준용하고 있다. ISCED는 광범위한 교육통계 자료의 국가 간 상호 비교, 관리가 가능하도록 국제적으로 협의된 개념적인 틀이다.

³ OECD 및 한국은행의 통계에서는 ‘기능별’ 재정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정부나 재정학계에서는 보다 일반적으로 ‘분야별’ 재정지출로 표현하고 있음.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박형수(2005)의 연구에서는 ‘분야별 재정지출’로, 김성자(2016)의 자료에서는 ‘정부기능별 분류’로 작성함. 본 연구에서는 재정통계 매뉴얼(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라 ‘기능별’로 표현하기로 한다.

COFOG의 교육 분야는 ISCED-97⁴에 따라 [표 2]와 같이 분류된다. ISCED는 여러 가지 사회적·교육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ISCED-76이 개발된 이후, UNESCO, OECD, 유럽연합 통계청(Statistical Office of European Union; EUROSTAT)의 공동작업하에

표 2. COFOG 교육 분야의 세분류: ISCED-97 적용

현재		ISCED-97(개정 전)	ISCED 2011(개정 후)
COFOG 대분류, 교육(709)			
중분류	소분류		
7091 취학 전 & 초등교육	70911 취학 전 교육	ISCED 0 취학 전 교육	ISCED 01 영아교육 ISCED 02 취학 전 교육
	70912 초등교육	ISCED 1 초등교육	ISCED 1 초등교육
7092 중등교육	70921 전기 중등교육	ISCED 2 전기 중등교육	ISCED 2 전기 중등교육
	70922 후기 중등교육	ISCED 3 후기 중등교육	ISCED 3 후기 중등교육
7093 중등 후 비고등교육	70930 중등 후 비고등교육	ISCED 4 중등 후 비고등교육	ISCED 4 중등 후 비고등교육
7094 고등교육	70941 1단계 고등교육	ISCED 5 1단계 고등교육	ISCED 5 전문(Short-Cycle) 교육단계 ISCED 6 학사 혹은 동등 교육단계 ISCED 7 석사 혹은 동등 교육단계
	70942 2단계 고등교육	ISCED 6 2단계 고등교육	ISCED 8 박사 혹은 동등 교육단계
7095 수준으로 정의할 수 없는 교육	70950 수준으로 정의할 수 없는 교육(성인교육, 직업훈련 등)	-	-
7096 교육에 대한 보조서비스	70960 교육에 대한 보조서비스	-	-
7097 교육 R&D	70970 교육 R&D	-	-
7098 기타	70980 기타	Not allocated level	Not allocated level

자료: IMF(2014), GFSM; UNESCO(2011), ISCED 매뉴얼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⁴ 최초의 ISCED는 1976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 20여 년간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존 ISCED-76에 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적용상의 문제점들과 ISCED-76이 개발된 1970년대 후반 이후 전개된 교육 부문(특히, 중등 후 교육)의 여러 가지 변화를 분류체계에 반영할 필요성이 대두됨으로써 교육프로그램의 분류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고 그 결과 UNESCO, OECD, 유럽연합 통계청(Statistical Office of European Union: EUROSTAT)의 공동작업하에 1997년 ISCED-97를 UNESCO 총회에서 채택하게 되었다(UNESCO, 1997; OECD 2004; 박종호 외(2010)에서 재인용). 그 이후, ISCED-97은 2011년에 사회적·교육적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ISCED의 필요성이 유럽국가들 중심으로 대두되었고, 이에 고등교육체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ISCED 2011로 개정되었다.

ISCED-97, ISCED 2011까지 새롭게 개정되어 왔다. ISCED-97과 비교하여 ISCED 2011은 3세 이하 0~2세 영아의 교육단계(01. Early Childhood Educational Development)가 신규로 추가되었고, 전문학사, 학사, 석사에 해당하는 고등교육과정의 더욱 세분화된 것이 특징적이다. 최근 IMF에서 발표된 GFSM 2014에 수록된 COFOG에도 여전히 ISCED-97를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시급히 ISCED 2011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교육 분야 재정지출 통계 생산

1) 교육 분야 관련 재정업무시스템과 공시사이트

재정전문가 혹은 일반 국민이 예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물어보는 가장 기초적인 질문은 어느 특정 관심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의 총액이 얼마냐는 것이다. 특히 교육사업의 경우는 학생, 학부모를 포함하여 온 국민의 관심 영역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교육재정의 총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① 중앙(dBrain), ② 지방자치단체(e-호조), ③ 교육지방자치단체(K-에듀파인), ④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DB 등 각기 독립적인 재정관리시스템에 산재되어 있는 재정정보를 종합하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각의 플랫폼에서 운영되고 있는 재정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할 수 있는 재정업무시스템 간 통합·연계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 지난 2019년부터 열린재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방자치단체의 예·결산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산재된 재정정보를 단순히 하나의 플랫폼 안에 모아두는 것은 일차원적인 단계이며, 이들의 정보를 연계·통합하여 분야별 총규모 산출 등 총체적인 시각에서 분석된 신규 통계자료 생산이 필요하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 분야 재정지출 관련 공시사이트, 재정업무시스템 간 재원의 흐름을 [그림 1]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교육 분야의 경우, 대부분 교육부(dBrain)에서 지출되는데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K-에듀파인)으로 교부되고, 고등교육은 직접 기관(대학)으로 집행된다. 교육부 이외 타 정부부처에서 대학으로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이 있으나, 이 금액은 dBrain에 교육 분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DB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e-호조)가 지방교육재정(K-에듀파인)으로 전출하는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과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방교육재정의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에 해당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으로 지원하는 지원금은 고등교육기관(대학)을 대상으로 조사된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DB에서 그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중앙재정		지방교육재정		지방재정	
열린재정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지방재정365	
dBrain		K-에듀파인		e-호조	
국가재정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교육비특별회계 학교회계	중앙정부이전수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 국고보조금 ✓ 특별회계전입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비법정전출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법정이전수입 ✓ 비법정이전수입		
국가재정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대학 직접지원금 등	대학회계	대학재정 대학재정알리미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DB	중앙정부이전수입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광역 / 기초	대학지원금 (지역혁신인재육성 장학금사업, 대학학자금 대출이자지원 등)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대학 직접지원금 등		국공립대 대학회계 대학회계 사립		

문제는 교육 분야의 전체 재정지출의 자료원과 구조를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각 정부부처마다 다른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분류한다면 정확한 재정통계를 생산할 수 없다. 실제 고등교육기관의 대학회계로 지원되었으나, dBrain에는 교육 분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사례들이 있다. 예를 들면, 동일하게 고등교육기관 운영지원임에도 불구하고 경찰대학 운영은 ‘공공질서 및 안전’으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한국폴리텍대학의 운영지원 사업은 ‘사회복지’로 분류되어 있다.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을 ‘농림수산 분야’로 분류한 것 역시 모두 교육 분야에 해당되므로 수정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정부 프로그램 예산체계 분류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항이다.

2) 우리나라 예산과목과 COFOG 연계

우리나라 교육 분야 재정지출의 총액을 확인하였다면, 그를 구성하는 각 사업, 정책, 제도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는 하위단위의 분류가 필요하다. COFOG 교육 분야의 부문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UNESCO가 발표한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를 준용하고 있는데, 취학 전&초등교육, 중등교육, 중등 후 비고등교육, 고등교육 등 총 8개로 구분된다. 반면,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프로그램 예산과목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으로 구분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으로 구분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부문에 대한 대상이 매우 포괄적이어서 ISCED의 분류에 따른 일대일 매칭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예를 들면, 학교교육 내실화, 학교교육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유아 및 초중등교육으로 묶여 있어 실제 초등교육을 대상으로 하는지, 중등교육을 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 평생·직업교육의 경우 ISCED 구분에는 없는 부문으로 우리나라 세부사업과 내용을 모두 검토한 후 수작업을 통해 분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평생·직업교육의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의 경우와 초중등교육에서 이루어지는 평생·직업교육이 섞여있는 것 또한 문제이다. 이런 경우, 각 교육단계에 따른 정부정책 성과 분석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제수준에서의 비교·분석에도 매우 제한적이다.

표 3. 예산과목 구조와 COFOG 연계

COFOG 중분류		우리나라 예산과목 구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분야	부문	분야	부문	분야	부문
709 교육	7091 취학 전&초등교육 7092 중등교육 7093 중등 후 비고등교육 7094 고등교육 7095 등급 외 교육 7096 교육 보조서비스 7097 교육 R&D 7098 기타	050 교육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052 고등교육 053 평생·직업교육 054 교육일반	050 교육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052 고등교육 053 평생·직업교육

자료: IMF, GFSM 201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행정안전부(2019),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4. 개선방안

1) 교육재정 총괄 정보관리 필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유아 및 초·중등과 고등교육 전체를 통합 관리·운영하는 교육재정 통합플랫폼이 부재하며, 분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재정관리시스템 간의 연계도 제대로 운

영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의 교육 분야 지출을 총체적으로 취합하고, 관리·운영하는 총괄 관리 기관(시설)을 신설을 통해 교육재정의 총량 규모 파악, 더욱 다양하고 세분화된 재정통계 생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교육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수요자(교육정책 입안자 및 연구자, 교육 수요자인 학생·학부모, 교육자 등)에게 정확한 교육재정통계 자료를 공시하고, 활용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2) 국제표준분류체계(ISCED)에 따른 프로그램 예산체계 필요

중앙정부 프로그램 예산체계를 살펴보면, 교육 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으로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는 유치원~고등학교 과정을 대상으로 한 교육복지 증진사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학교교육 내실화 등 사업으로 구성되는데, 문제는 수혜대상(기관)에 대한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고, 지출내역을 파악할 수 없어 재정통계의 정합성과 재정투자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점이다.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와 같이 각 교육단계별로 세분화될 필요가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에도 시도교육청에서 지출내역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중앙정부(dBrain) 재정통계에서 고등교육 부문에 해당하는 고등교육기관(대학) 지원금,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지원금 등이 사회복지, 농림수산 분야로 분류된 사례가 확인되었는데, 교육 분야는 타 분야의 성격과 중복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부처 간 협의를 통해 중앙정부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기준 마련 필요하다. 더불어 현재 GFSM 2014에서 여전히 ISCED-97에 따라 분류되고 있는데 ISCED 2011로 현행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김성자(2016). 「SNA기준 정부기능별분류(COFOG) 산출방법과 GFS 기준과의 차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오피니언.
- 박종호·변기용·우선영(2010). 「개정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에 따른 한국의 교육체제분류 개정방안 및 효과분석」, 한국교육 제37권 제2호.
- 정성호·김성자·문하은(2016). 「정부기능별분류(COFOG)의 체계적 고찰 및 활용」, 한국은행 논고.
-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9). 「2019 알기 쉬운 재정통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4). 「재정통계 매뉴얼 2014」.
- 행정안전부(2019).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자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대학재정알리미 <https://uniarlimi.kasfo.or.kr>
- 지방교육재정알리미 <https://www.eduinfo.go.kr>
- 지방재정365 <https://lofin.mois.go.kr>
- 열린재정 <https://www.openfiscaldata.go.kr>
- IMF(2014).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2021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 방향

정부는 9월 '코로나19 극복, 선도국가'를 위한 「2021년 예산안」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제출했다.

「2021년 예산안」은 경기회복, 한국판 뉴딜 투자, 국정과제 이행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했으며,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혁신적 포용국가 성과 확산과 재정의 효과성·지속가능성 제고를 재정운용 방향으로 설정했다. 본고에서는 2021년 경제여건 및 예산편성 방향, 재정총량, 분야별 재원 배분, 중점 투자사업 등을 살펴본다.

지은초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anncho@kpfis.or.kr)

1 _____ 2021년 경제여건 및 예산편성 방향

2020년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불확실성의 연속인 한해였다. 2021년 이후 글로벌 경제는 각국의 적극적인 대응정책으로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예상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재확산 가능성과 경기 위축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 수출 부진 등 잠재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정부는 신속하고 과감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서 강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나타난 재정수지의 적자와 늘어난 국가채무는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예산안」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2021년 예산안」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국내 경제반등을 위한 대응과 함께 선도형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고, 정부의 국정과제를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혁신·포용·안전과 관련하여 재정의 적극적인



인 역할, 지출 구조조정, 성과관리체계 개편, 재원 확충 및 다변화 노력의 추진 등 재정혁신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운용 방향을 설정했다.

2 재정총량

「2021년 예산안」에 따른 총수입은 483.0조원으로 2020년 대비 1.2조원(0.3%) 증가했으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2024년 총수입은 552.2조원으로 2020년부터 연평균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총지출의 경우 코로나19 극복 및 경기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기조에 따라 2020년 대비 43.5조원(8.5%) 증가한 555.8조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총수입과 총지출의 격차는 2021년 기준 -8.2%p로 2020년(-7.9%p)보다 더 확대되었다.

표 1. 재정총량: 2021년 예산안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단위: 조원, %)

	2020년		2021년 예산안			국가재정운용계획			연평균 증가율 (’20~’24)
	본예산	3차 추경	예산	2020년 본예산 대비		2022년	2023년	2024년	
				증감	%				
총수입	481.8	470.7	483.0	1.2	0.3	505.4	527.8	552.2	3.5
총지출	512.3	546.9	555.8	43.5	8.5	589.1	615.7	640.3	5.7
관리재정수지	-71.5	-111.5	-109.7	-38.2	-53.4	-123.2	-128.2	-127.5	-15.6
(GDP 대비)	-3.5	-5.8	-5.4	-1.9	-54.3	-5.9	-5.9	-5.6	-12.5
통합재정수지	-30.5	-76.2	-72.8	-42.3	-138.7	-83.7	-87.9	-88.1	-30.4
(GDP 대비)	-1.5	-3.9	-3.6	-2.1	-140.0	-4.0	-4.0	-3.9	-27.0
국가채무	805.2	839.4	945.0	139.8	17.4	1,070.3	1,196.3	1,327.0	13.3
(GDP 대비)	39.8	43.5	46.7	6.9	17.3	50.9	54.6	58.3	10.0

자료: 기획재정부(2020), 「2021년 예산안」,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총지출은 2024년까지 연평균 5.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총지출 대비 의무·재량지출의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부터 의무지출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2018년을 기점으로 의무지출이 재량지출의 규모를 넘어선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2020년 이후 재량지출의 비중은 증가하고, 의무지출의 비중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무지출의 경우, 복지 분야 법정지출을 중심으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금번 재정운용계획에서는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제도개선 노력과 부정수급자 제재 강화, 보조금 수급관리 인프라 확충 등 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코로나19 발 경제위기의 극복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을 위해 유사·중복, 저성과, 집행부진 사업 등을 중심으로 재량지출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방침이다.

표 2. 총지출 대비 의무·재량지출의 비중 추이 및 전망

(단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의무지출	47.0	46.0	47.3	49.2	50.6	50.1	49.9	48.1	48.0	48.0	49.1
재량지출	53.0	54.0	52.7	50.8	49.4	49.0	50.1	51.9	52.0	52.0	5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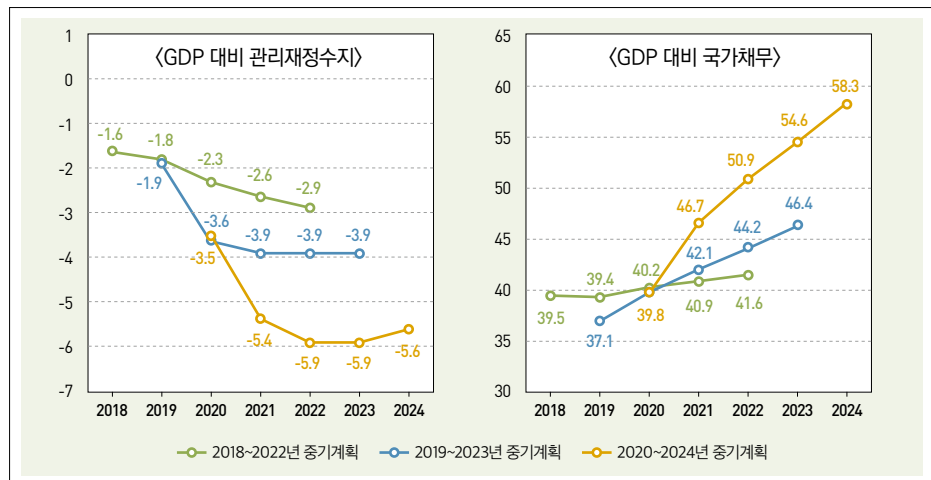
주: 2014~2020년 국회 확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최근 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1년도 관리재정수지는 2020년 대비 적자 폭이 38.2조원 증가해 109.7조원 적자로 나타났다.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23년 관리재정수지의 적자가 128.2조원까지 늘어나다 2024년 경제회복 추이에 따라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표 1 참고). [그림 1]의 연도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전망치를 살펴보면, 총지출의 증가와 세입 기반 약화로 인해 적자 비율이 2021년 5.4%에서 2023년 5.9%로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20년 이후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각각 2% 중후반, 3% 후반으로 전망했으나, 2020~2024년 전망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과 포용국가 체감성과의 확산, 국정과 제 성과 가시화 등 확장적 재정 기조에 따른 지출 증가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림 1.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관리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단위: %)



자료: 기획재정부, 「최근 3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8~2022, 2019~2023, 2020~2024)」

코로나19의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응에 있어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진행됨에 따라, 2021년 국가채무는 945.0조원으로 2020년 대비 139.8조원(17.4%) 증가했으며, 국

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2024년 국가채무는 1,327.0조원으로 2020년부터 연평균 13.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표 1] 참고). GDP 대비 국가채무 전망치를 살펴보면, 2021년과 2022년에 대해 지난 2018~2022년 및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40% 초반대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예상했다. 그러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20년 이후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50%대 수준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 강화를 통한 채무 비율 증가 속도를 완화하여 2024년까지 국가채무 비율을 50% 후반 수준 이내로 관리한다는 입장이다.

3 ————— 12대 분야별 자원 배분

「2021년 예산안」의 분야별 자원 배분을 살펴보면, 교육 분야(-2.2%)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지출 증가율이 모두 2020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의 총지출 증가율(8.5%)을 기준으로 산업·중소·에너지(22.9%), 환경(16.7%), R&D(12.3%), SOC(11.9%), 보건·복지·고용(10.7%), 일반·지방행정(9.5%) 분야 순으로 지출 증가율이 높았다. 또한

표 3. 분야별 자원 배분

(단위: 조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예산안		%	국가재정운용계획			연평균 증가율 (‘20~’24)
			증감		2022년	2023년	2024년	
총지출	512.3	555.8	43.5	8.5	589.1	615.7	640.3	5.7
보건·복지·고용	180.5	199.9	19.4	10.7	217.4	230.2	242.7	7.7
일자리	25.5	30.6	5.1	20.0				
교육	72.6	71.0	-1.6	-2.2	74.2	75.4	77.9	1.8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5.4	53.3	-2.1	-3.7				
문화·체육·관광	8.0	8.4	0.4	5.1	8.8	9.2	9.4	4.2
환경	9.0	10.5	1.5	16.7	11.4	12.1	12.6	8.7
R&D	24.2	27.2	3.0	12.3	29.1	30.7	32.0	7.2
산업·중소·에너지	23.7	29.1	5.4	22.9	32.3	34.2	35.6	10.7
SOC	23.2	26.0	2.8	11.9	27.8	28.7	29.3	6.0
농림·수산·식품	21.5	22.4	0.9	4.0	23.0	23.3	23.5	2.3
국방	50.2	52.9	2.7	5.5	56.1	58.6	60.9	5.0
외교·통일	5.5	5.7	0.2	4.3	6.0	6.2	6.5	4.1
공공질서·안전	20.8	21.8	1.0	4.4	22.8	23.7	24.6	4.2
일반·지방행정	79.0	86.5	7.5	9.5	87.6	92.0	94.9	4.7
지방교부세	52.2	51.8	-0.4	-0.8				

자료: 기획재정부(2020), 「2021년 예산안」,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국방(5.5%), 문화·체육·관광(5.1%), 공공질서·안전(4.4%), 외교·통일(4.3%), 농림·수산·식품(4.0%) 분야의 경우 총지출 증가율에 미치지지는 못했지만, 2020년 대비 증가했다.

금번 예산안에서는 특히 경제 분야의 지출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산업·중소·에너지, 환경, R&D 분야의 경우 2021년도 선도형 경제 구현을 위한 디지털·그린 뉴딜 정책의 핵심 분야다. 산업·중소·에너지 분야에서는 한국판 뉴딜 투자 추진을 위해 디지털 경제·저탄소 에너지 전환 산업과 미래 신산업 전략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마련하고 있어 12대 분야 중 가장 높은 22.9%로 증가했다. 환경 분야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그린 뉴딜 및 생활환경 개선 투자에 따라 2020년 대비 지출이 16.7% 증가했다. 또한 D·N·A¹

BIG3, 소재부품장비의 투자 확대를 통해 선도형 경제를 이끌어 가기 위한 R&D 분야의 지출 증가율(12.3%)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SOC 분야의 경우, SOC 디지털화와 국민 생활 밀착형 인프라 구축을 위해 11.9% 증가했다.

사회 분야 지출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고용·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투자가 강화된 모습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발굴·해소하고, 복지서비스와 공공보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 10.7%의 지출 증가율이 나타났다. 특히, 일자리 분야에서 취업 취약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확대와 국민 취업지원제도 도입 등의 사업 추진에 따라 2020년 대비 지출이 20.0% 증가했다.

4. _____ 중점 투자사업

정부는 「2021년 예산안」에 코로나19 극복과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담았다.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혁신적 재정운용 등 재정혁신에 기반한 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② 미래 성장동력 확보, ③ 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 공고화, ④ 국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 등 4대 중점 투자사업을 선정했다. 또한,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전략과제인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한다. 디지털 뉴딜에서는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SOC 디지털화, 디지털 트윈 등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촉진·확산하는 사업이 추진되며, 그린 뉴딜

¹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의 약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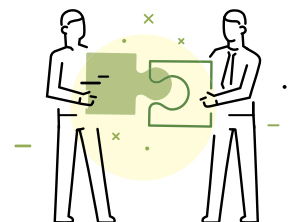
목차	코로나 19 극복과 선도국가로의 대전환	
	◇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성장동력 확보로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 ◇ 고용·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하고 국민 안심사회 구현	
전략과제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 [디지털 뉴딜] 데이터 덩어리, 지능형(AI) 정부, SOC 디지털화, 디지털 트윈 등 • [그린 뉴딜] 그린리모델링, 그린스마일즈,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사회안전망] 구축, 포용적 [사회복지] 확대	
4대	1)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① 고용 유지 및 민간·공공기업차 창출 ② 4대 비우후조리 지원(사망노령수급권 확대 등 소비활력 제고) ③ 민간투자(형성금융, 한미 유한회 우회) 및 공공투자(SOC 등 공공사업)의 안정적 확충 ④ 수출유치·세제 지원, 무역금융 등 수출활력 제고 ⑤ 지역경제진주자, 지역소멸대응 프로젝트 등 국가균형발전 본격투자	
투자	2) 미래 성장동력 확보	
	① 혁신성장 생태계 (R&D, 인재, 금융, 조달) 조성 ② DNA, BIG3 등 미래산업 육성 ③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산업 육성 ④ 소재부품·장비, 반도체·바이오, 융합서비스 산업 육성 등 주력 산업 역동성 강화	
자	3) 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① 생애교육·고용주세 확대(안전망) 확대 ② 장애인·노년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 ③ 정보·사회적 격차 대응 ④ 조세·안정적 직업 기회 등 전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 ⑤ 인구구조 변화(출산·고령화) 대응 ⑥ 청년 희망채널지 지원	
정	4) 국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	
	① 방역·위급 고도화 및 글로벌 선도 보호 ② 재해예방 및 국민생존·인권 보장 ③ 깨끗한공공·맑은물·녹색공간 등 국민 생활환경 청정화 3대 프로젝트 ④ 스마트 건강 기반 구축 및 웰사기반지향 지원 ⑤ 전력화 외교·협력 강화	
제정	⑤ 재정지출을 10% 주조조정 등 과감한 지출 주조조정	
	① 협업예산 강화 등 혁신적 재정운영을 확립	



사업으로는 경제기반의 친환경·저탄소 전환 가속화를 위한 그린 리모델링, 그린 스마트스쿨,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사업이 추진된다. 더불어 사람 중심의 포용국가를 기반으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이 추진된다.

「2021년 예산안」의 10대 중점 프로젝트는 총 160조원 규모이며, 대표적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 4대 사회안전망 확충에 46.9조원, 중소·벤처기업 정책금융으로 투자·융자·보증 자금에 33.9조원이 투입된다. 또한, 한국판 뉴딜의 본격 추진을 위해 21.3조원, 일자리·주거·금융·교육 등 청년 희망패키지에 20.7조원을 투자한다.

정부의 2021년 예산 편성 및 국가재정운용 방향을 종합해보면, 코로나19 발 경제위기의 극복, 한국형 뉴딜 사업 추진을 통한 글로벌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와 중장기 지속가능성 제고를 반영하고 있다. 코로나19를 포함한 다양한 위기들을 헤쳐 나아가야 하는 지금, 이 중대한 시기에 ‘선도형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빛을 발하기를 기대해 본다.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정부는 5년마다 인구 및 거시 재정지표를 반영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 위험요인에 대비하기 위해 장기 시계(視界)에서의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9월에 발표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정성호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위원(jazzsh@kpfis.or.kr)

1. 인구 고위 및 중위(통계청), 거시변수 적극 및 중립(KDI) 전망치를 모두 활용했다.
2. 2015년 전망치는 인구 중위(통계청) 및 거시변수 중립(KDI) 전망치 (현상유지 시나리오)만 활용했고, 총지출이 아닌 재량지출 증가율을 활용하여 가정했다.

1 ————— 추진 배경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국제적으로 양호한 수준이긴 하나, 고령화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및 성장률 하락 등 구조적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부채 비율을 살펴보면 201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일반정부)는 40%이고, OECD 국가 평균은 108.9%이다. 이처럼 최근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각국의 부채가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 또한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2020~2024년)에 기초해 볼 때 수입, 지출, 재정총량 등 재정여건은 녹록지 않다. 수입(총수입)은 연평균 3.5%, 지출(총지출)은 연평균 5.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출 측면에서 의무지출이 연평균 5.3%, 재정지출이 6.2%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총량은 세입 기반 약화, 지출 소요 확대 등으로 인해 2024년 기준 관리재정수지가 GDP 대비 -5.6%, 통합재정수지가 GDP 대비 -3.9%, 국가채무는 GDP 대비 58.3%가 될 전망이다.

미국, 영국, 호주, EU와 같은 주요 선진국 및 경제권에서는 인구의 고령화가 장기적으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을까. 2006년에 「국가재정법」을 제정하여 장기재정전망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2011년 12월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정부 차원의 장기재정전망이 좀 더 구체화되었으며, 2015년 12월 최초로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최근의 인구 및 성장률 추세, 경제·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 위험요인에 대비하기 위해 장기 시계(視界)에서의 재정 상황을 전망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은 「국가재정법」 제7조④(기획재정부 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해야 한다.)에 근거하여 2019년 하반기부터 민관 합동 「장기재정전망협의회」(민간위원 8명, 9개 부처 국장 등 29명, 위원장: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장기재정전망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KDI·통계청의 거시전망 지표를 공통 지표로 활용하고, 8개 전문기관의 분야별 전망을 종합하여 추계했다.

2 ————— 전망 전제 및 방식

전망의 전제는 크게 인구·거시지표와 총지출 증가율로 구분된다. 인구·거시지표는 전문기관의 추정치를 활용하여 시나리오별 인구 및 거시변수를 가정하는데,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2019년 3월)와 KDI 전망치(2020년 4월)¹⁾를 활용했다. 총지출 증가율은 선진국 사례 등을 감안한 총지출 추이를 활용했다.²⁾



◎ 인구·거시지표

인구·거시지표는 시나리오별 전문기관(통계청, KDI)의 전망치를 활용했다. 시나리오별 인구·거시 변수 가정에 따른 정부의 생산성 제고 노력 또는 인구정책이 성과를 나타낸 경우(시나리오 2, 3)와 그렇지 않은 경우(시나리오 1)로 구분했다. 즉, 시나리오 1은 현상유지(정책 무대응), 시나리오 2는 정부의 성장대응, 시나리오 3은 정부의 인구대응을 가정했다.

- ① **(현상유지 시나리오)** 현재의 인구 감소 추세가 장기간 유지되고, 성장률이 크게 둔화(통계청 인구 '중위' - KDI 거시 '중립')
 - (인구) 낮은 출산율 등에 따라 2020년 대비 2060년 총인구는 △894만명, 생산가능인구는 △1,678만명 감소 전망
 - (거시지표) 인구 감소 등에 따라 실질 성장률은 2020년대 평균 2.3%(명목 3.8%)에서 2050년대 0.5%(명목 2.2%) 수준으로 크게 하락
- ② **(성장대응 시나리오)**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 등에 따른 총요소생산성 향상으로 성장률 하락폭 둔화(통계청 인구 '중위' - KDI 거시 '적극')
 - (인구) 현상유지 시나리오와 동일
 - (거시지표) 실질성장률은 2020년대 평균 3.1%(명목 4.6%)에서 2050년대 1.3%(명목 2.9%) 수준으로 하락
- ③ **(인구대응 시나리오)** 출산율 제고, 외국인 인력 활용 등에 따라 인구 감소폭이 둔화(통계청 인구 '고위' - KDI 거시 '중립')
 - (인구) 2020년 대비 2060년 총인구는 △386만명, 생산가능인구는 △1,403만명 감소 전망
 - (거시지표) 실질성장률은 2020년대 평균 2.4%(명목 3.9%)에서 2050년대 0.9%(명목 2.6%) 수준으로 하락

◎ 총지출 증가율

총지출 증가율은 중장기적으로 총지출이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했다. 아울러 고령화·사회안전망 확충 등으로 의무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³하는 한편, 재량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가정했다.



3 _____ 장기재정전망 해석 시 유의사항

장기재정전망은 다양한 요인과 가정에 따라 영향을 받으므로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이를 테면 인구 및 거시변수 가정, 재정제도에 의해 장기재정전망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예컨 대,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 국가채무로 산정되기 때문에 경상 GDP 규모에 따라 국가 채무 비율이 달라진다. 정부의 지출절감 및 수입확충 노력 등 재정 정도의 변화도 재정수 지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번에 발표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은 2015년 전망 대비 인구 및 거시변수 가정의 변화 폭에 따라 전망 결과가 크게 상이할 가능성이 있다(생 산가능인구 129만명, 명목 GDP 1,960조원). 특히 경제·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제도 도 큰 폭의 변화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편의상 향후 40년간 제도의 변화가 없는 것으 로 가정한만큼 재정전망 결과의 해석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4 _____ 장기재정전망 결과

이번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은 인구·거시경제 시나리오별(1, 2, 3) 국가채무의 변 화를 제시했다⁴. 시나리오별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은 64.5~81.1% 범위로 전망된다. 특 히 시나리오별 정책조합을 가미한 결과, 즉 신규 의무지출을 도입⁵하면서 수입 확대⁶를 가 정하면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은 55.1~65.4% 범위로 감소할 전망이다.

장기재정전망 결과

구분	주요 전제		2060년 국가채무 비율(%)
	인구	거시	
시나리오1: 현상유지(정책 무대응)	중위	중립	81.1
정책조합			65.4
시나리오2: 성장대응	중위	적극	64.5
정책조합			55.1
시나리오3: 인구대응	고위	중립	79.7
정책조합			64.6

자료: 기획재정부(2020),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아래 그림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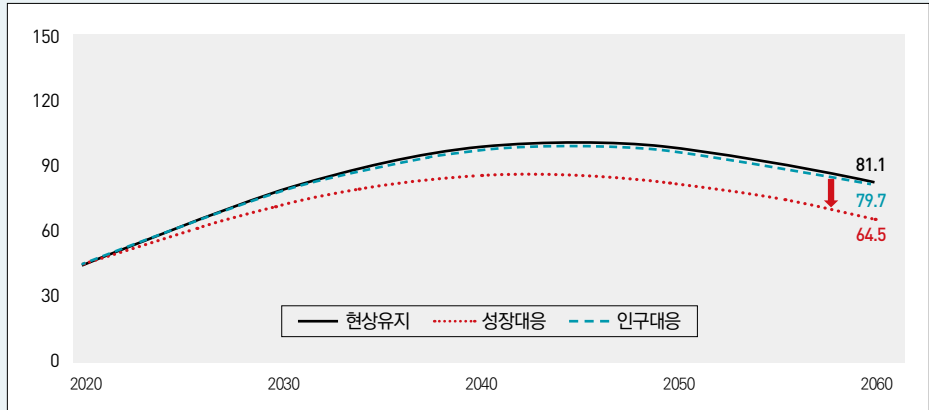
³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수급자 증가, 국가채무 이자 비용 증가 등이다.

⁴ (2015년 전망 시) 기본 시나리오(인구 중위, 거시 중립) + 민감도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⁵ 시나리오 1, 2, 3 공통 적용: (2025~2040년) 10조원 → (2041~2050년) 20조원 → (2051~2060년) 30조원

⁶ 시나리오 1, 2, 3 공통 적용: 2050년까지 점진적으로 GDP 대비 2%p 수준의 수입 확대 후 유지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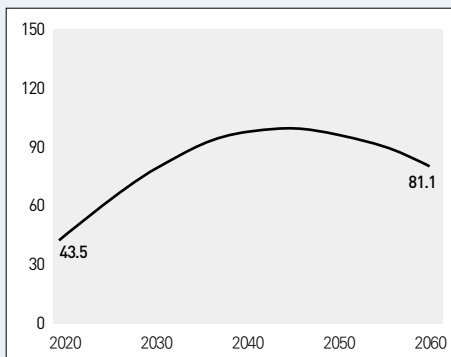
(단위: %)



【현상유지 시나리오 1】 인구 감소 추세 유지(통계청 인구중위) + 성장률 하락(KDI 거시중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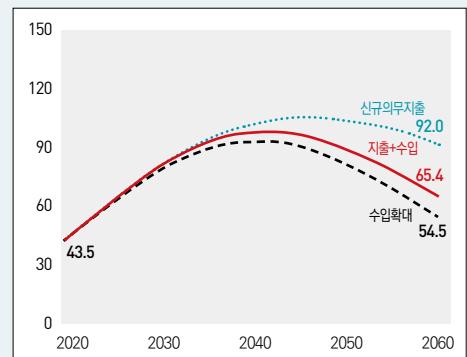
국가채무 측면에서 성장률 하락에 따른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 81.1%로 전망된다. 관리재정수지는 2020년 △5.8%에서 꾸준히 개선되어 2057년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⁷. 국가채무 비율은 지속해서 증가하다 2040년대 중반 이후부터 채무 증가 속도가 경상 GDP 증가 속도보다 느려지면서 하락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정책조합은 2025년 이후 신규 의무지출을 도입하면서, 2050년까지 GDP 대비 2%p 수준의 수입 확대를 전제할 때 2060년 채무 비율은 65.4%로 전망했다.

국가채무 비율



정책조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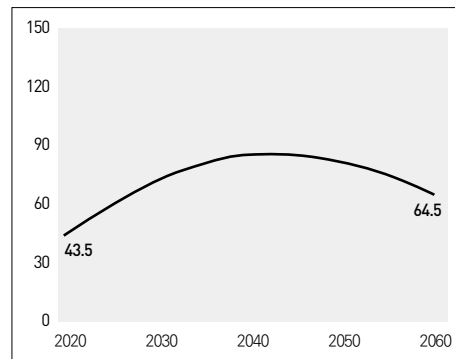


⁷ 시나리오 2와 3도 동일하다.

【성장대응 시나리오 2】 경제체질 개선으로 성장을 하락폭 둔화(통계청 인구 중위 + KDI 거시적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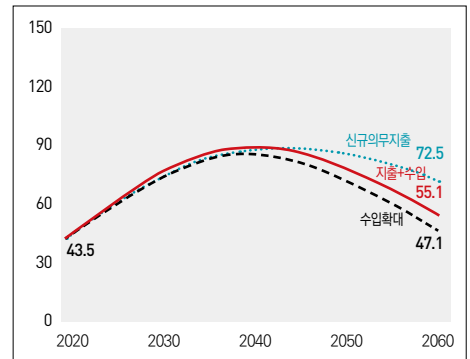
국가채무 측면에서 성장률 하락폭이 둔화되면서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 64.5%로 전망된다. 정책조합은 2025년 이후 신규 의무지출을 도입하면서, 2050년까지 GDP 대비 2%p 수준의 수입 확대를 전제할 때 2060년 채무 비율은 55.1%로 전망했다.

국가채무 비율



정책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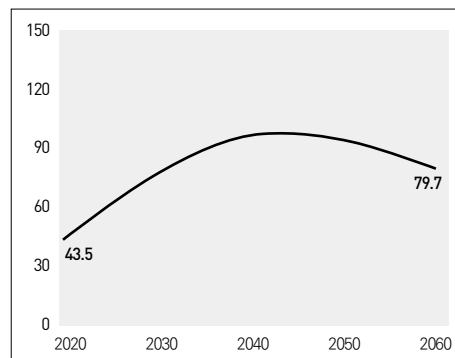
(단위: %)



【인구대응 시나리오 3】 출산율 제고 등에 따라 인구 감소 폭 둔화(통계청 인구 고위 + KDI 거시중립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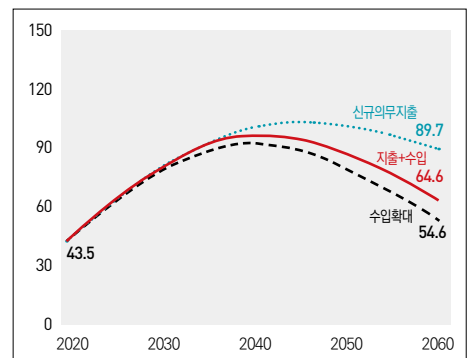
국가채무 측면에서 인구 감소폭이 둔화되고 성장세는 개선되었으나, 지출도 함께 늘면서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 79.7%로 전망했다. 정책조합은 2025년 이후 신규 의무지출을 도입하면서 2050년까지 GDP 대비 2%p 수준의 수입 확대를 전제할 때 2060년 채무비율은 64.6%로 전망했다.

국가채무 비율



정책조합

(단위: %)



⁸ 시나리오 3은 인구 '고위'를 반영한 거시중립이며, 인구 '중위'를 반영한 거시중립과 상이하다.

【 4대 공적연금 추계 결과⁹ 】

◎ 국민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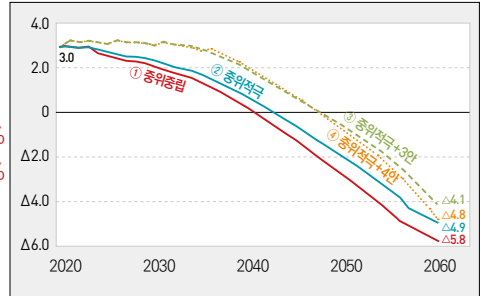
국민연금은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수가 증가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가입자 수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 ① 중위중립: 2041년 적자 발생(2020년)3.0% → (2040년)0.2% → (2060년)△5.8%
- ② 중위적극: 2043년 적자 발생(2020년)3.0% → (2040년)0.6% → (2060년)△4.9%
- ③ 중위적극+3안: 2048년 적자 발생(2020년)3.0% → (2040년)1.9% → (2060년)△4.1%
- ④ 중위적극+4안: 2048년 적자 발생(2020년)3.0% → (2040년)2.0% → (2060년)△4.8%

*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상의 개선 방안(3안, 4안) 반영을 가정할 경우

- 3안: 소득대체율 40% → 45% + 보험료율 9% → 12%
- 4안: 소득대체율 40% → 50% + 보험료율 9% →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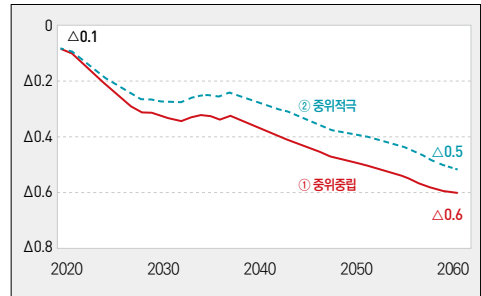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당기재정수지(%), 아래 그림 동일)



◎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은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수가 증가하는 반면, 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공무원 수(가입자 수)는 2046년 이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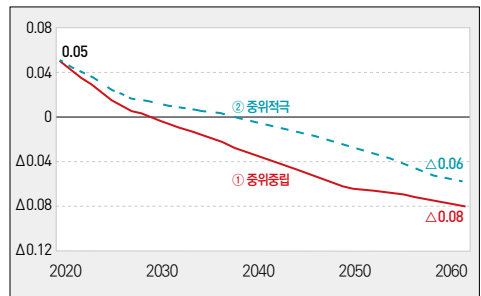
- ① 중위중립: (2020년)△0.1% → (2040년)△0.4% → (2060년)△0.6%
- ② 중위적극: (2020년)△0.1% → (2040년)△0.3% → (2060년)△0.5%



◎ 사학연금

사학연금은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수가 증가하는 반면,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교원 수(가입자 수)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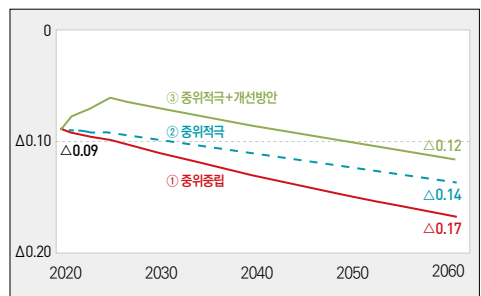
- ① 중위중립: 2029년 적자 발생
(2020년)0.05% → (2040년)△0.04% → (2060년)△0.08%
- ② 중위적극: 2038년 적자 발생
(2020년)0.05% → (2040년)△0.01% → (2060년)△0.06%



◎ 군인연금

군인연금은 기대수명 연장에 따라 수급자 수가 증가하고,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상 군인 수(가입자 수)는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 ① 중위중립: (2020년)△0.09% → (2040년)△0.13% → (2060년)△0.17%
- ② 중위적극: (2020년)△0.09% → (2040년)△0.11% → (2060년)△0.14%
- ③ 중위적극+개선방안: (2020년)△0.09% → (2040년)△0.09% → (2060년)△0.12%



5 시사점 및 향후 대응

이번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결과에 기초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고령화 및 성장률 하락 추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재정 안정성(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위험이 크다. 따라서 노인 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연금 및 보험 부문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 둘째, 재정건전화의 기반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 고령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재량지출의 증가 속도 관리가 필요하고(예, 불요불급한 재량지출을 지속적으로 구조조정), 사회연금보험의 지속가능성이 개선되기 위한 합리적인 수준의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복지수준 확대에 맞는 국민부담률 수준으로 변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향후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성장률 하락이 재정 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인 만큼 가용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성장률 제고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둘째, 기존의 비과세·감면제도 중 실효성이 낮고 불요불급한 항목 중심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조세지출 판단기준 등의 보완을 통해 조세지출 성과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셋째, 혁신적 포용국가의 성과 확산을 적극 뒷받침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특단의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 대안으로 의무지출 비중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유사·중복, 저성과, 집행부진 사업 등을 중심으로 재량지출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관행적 출연·보조사업 존속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장 역점을 뒀야 할 분야는 인구·사회·산업 구조의 변화 등 미래 재정수요 변화 양상을 면밀하게 분석한 것을 토대로 해 기존 재정지출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넷째, 의무지출 증가에 대응하여 재량지출 증가 속도를 낮추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채무 증가 속도 관리를 위한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8대 연금·보험 분야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다양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여섯째, 향후 재정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9 (2015년 전망 시) 재정수지(흑자 최대치→적자 발생 분기점), 적립금(적립 최대치→적립금 소진 시기)을 제시했다.



①

2021년 예산안의 고민과 의지, 그리고 도전¹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junghun.kim@fpi.kr)



올봄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릴 때 경제 회복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 알파벳 모양으로 제시되었다. 경기 하강 이후 바로 회복하는 V자, 이보다는 다소 더디게 회복되는 U자, V로 회복되는 듯하면서 지지부진한 회복으로 이어지는 나이키 로고형, 그리고 V로 회복되는가 싶더니 다시 경기 하강으로 이어지는 W자 등. 이른 봄만 하더라도 V자에 대한 희망이 있었지만, 여름에는 나이키 로고형이 많이 거론됐었다. 그러나 가장 걱정스러웠던 시나리오는 경기 회복인가 싶더니 경기 침체가 다시 오는 W자이었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한국은 W자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내심 기대했었다. 그러나 최근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한국도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완화된 형태이긴 하지만 W자 경기침체를 피하기 어려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경제는 현재 뿌연 안개 속에서 곳곳에 암초가 있는 해역을 항해하고 있는 선박과도 같다. 따라서 코로나19 위기에 좌초되지 않으려면 코로나19가 촉발시키고 있는 경제위기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 재무장관, 하버드대 총장을 역임한 래리 서머스 교수는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세계경제가 ‘W+K’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². K는 부익부·빈익빈을 의미한다. 즉, 서머스 교수가 진단하는 코로나19 경제위기의 속성은 ‘경제 침체의 지속 + 소득·자산 양극화’의 이중적인 고통이다.

며칠 전 발표된 예산안에는 이러한 이중적인 경제적 고통을 극복하고자 하는 재정당국의 고민이 담겨 있다. 경제를 살리고 취약계층을 지원(‘W+K’ 대응)하기 위하여 올해의 재정지출을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대폭 늘렸는데, 내년 예산안에도 이러한 확장적 재정지출 기조를 유지하였다. 코로나19 경기침체로 올해와 내년의 세수가 크게 줄기 때문에 이러한 적극적 재정지출로 재정적자 규모가 GDP 대비 5%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22년부터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세출-세입 격차가 바로 축소되지는 않기 때문에 2024년까지 국가채무가 58%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¹ 이 글을 축약한 내용이 국민일보(2020. 9. 17.)에 게재되었다.

² 부익부·빈익빈 경기회복을 K자 경기회복으로 표현한 글은 피터 애트워터 교수의 파이낸셜 타임스 6월 기고문에 실렸었다(Peter Atwater(2002. 6. 10.), “The gap between the haves and the have-nots is widening sharply”, Financial Times).



**한국호는 코로나19 경제위기의 암초 해역을 무사히 지나 순항할 것인가?
국가채무의 증가 여부는 예산 확보 주체(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예산 편성 주체(재정당국) 간의 균형추에 달려 있다.**

이러한 2021년 예산안에 대해 많은 언론이 초슈퍼 예산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걱정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일단 발생하면 확장적 재정정책을 빨리 마감하는 위험성이 길게 유지할 때보다 훨씬 더 크다³. 따라서 경제의 W형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당분간 이어가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번 코로나19 경제위기는 취약계층(자영업자, 임시직, 중소기업 등)에 재난 수준의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양극화에 대응하는 재정 지원의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코로나와의 전쟁으로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 생계를 위협받는 가계에 대한 긴급 지원을 시행함에 따라 OECD 국가들의 경우 2021년 재정적자가 평균 19%까지 치솟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은 문자 그대로 선방을 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이번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고 나면 큰 폭으로 증가한 국가채무의 안정화라는 어려운 과제가 분명히 남아있다.

³ Olivier J. Blanchard and Daniel Leigh(2013), "Growth Forecast Errors and Fiscal Multipliers", American Economic Review, 103 (3), 117-20.

한국호는 코로나19 경제위기의 암초 해역을 무사히 지나 순항할 것인가? 적어도 재정에 관한 한, 재정당국에게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준다면 10년의 시계에서 국가채무 수준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 문제는 모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당국을 압박하는 입장에 있다는 점이다. 「정부조직법」 제27조는 기획재정부에 국가채무 관장 업무를 부여하고 있고 나머지 조항은 모두 지출부처의 업무(예산의 필요)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채무의 증가 여부는 예산 확보 주체(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예산 편성 주체(재정당국) 간의 균형추에 달려 있다. 1990년대 초반 유럽공동체는 유럽 국가들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폰 헤이건 교수에게 「재정건전성 보고서」를 의뢰했는데, 이 보고서의 핵심은 “재정건전성과 재정당국의 권한은 비례한다”였다⁴. 당시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었던 스웨덴은 폰 헤이건 교수의 권고를 실행에 옮겨 재정당국의 권한 강화를 추진하였고 그 결과 경제위기를 극복한 점이 재정제도 연구의 유명한 사례가 되어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W자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21년까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이 필요하다. 또한 코로나 경제위기의 K자 양극화에 대응하여 한계 상황에 직면한 기업과 가계에 대하여 최대한의 집중적인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2~3년 동안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그 이후 예산 전체에 대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중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경제 여건이 주어진다.

질병관리본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최선의 대안인 듯이, 국가채무의 안정화는 재정당국의 역할과 책임의 강화에 달려 있다. 예산 이론의 대가 아론 윌다브스키 교수는 “예산은 효율과 정치의 절묘한 결합”이라고 하였다⁵. 한국의 경우 이 절묘한 결합은 항상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왔다. 결합의 섀범이 복잡해지고는 있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확신해 본다.

⁴ Jürgen von Hagen(1992), “Budgeting Procedures and Fiscal Performance in the European Communities”, Economic Papers,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⁵ Aaron Wildavsky(1961), “Political Implications of Budgetary Reform,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21(1), 183-190.

재정적자 100조원 시대의 재정관리

박형수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객원교수, 전 조세재정연구원장(hspark23@gmail.com)



‘악어의 입’과 ‘재정적자 100조원’ 시대로의 돌입

지난 1일 발표된 2021년 정부 예산안은 총지출 규모가 556조원으로 ‘超슈퍼예산’으로 불리었던 2020년 본예산보다 44조원 증가해 가히 ‘超슈퍼울트라예산’이라 불릴만하다. 정부는 경기회복을 전인하고, 한국형 뉴딜을 뒷받침하며, 국정과제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총수입 증가가 1조원(국세 수입은 9조원 감소)에 불과해, 재정수지가 110조원 적자를 보이고 국가채무가 140조원이 나 증가한다는 점이다.

과거 정부에서는 연간 20조원 내외의 총수입 증가에 맞추어 총지출 증가를 20조원 내외로 억제해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국가재정을 훨씬 건전하게 유지해왔다. 그러나 일본이 골치 앓았던 소위 ‘악어의 입’이라 불렸던 매우 이례적인 재정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부터 3년 연속으로 발생하고 있다. 총수입이 늘어나지 않고 국세수입은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데도, 총지출 증가 규모는 종전의 2배인 40조원이 넘는 등 폭증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금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00조원을 돌파하는 ‘재정적자 100조원’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동안 이러한 ‘악어의 입’ 문제로 인해 국가채무 비율이 65%에서 200%로 급증했었는데, 우리나라도 2017년 말 36%에서 2024년 58.3%로 급격히 상승할 전망이다.

이러한 국가재정의 건전성 악화는 이미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이전인 2019년부터 조짐을 보였었다. 금년들어 대규모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면서 재정건전성이 급속히 무너지고 있고 내년 이후에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정부 전망에 따르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2016년까지 누적된 국가채무 규모가 627조원인데, 지난 4년과 향후 4년 등 불과 8년 만에 700조원이나 늘어나 2024년 말에는 1,327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정부도 국제신용평가회사인 Fitch가 7월 말에 재정악화 등을 이유로 미국과 일본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확장적 재정기조 하에서 빠르게 늘어난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에 대응해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금년까지 총 17차례 작성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중기재정운용 목표를 비교해 보면, 참여정부(2004~2007년)와 MB정부(2008~2012년)에서 작성된 9차례는 국가채무 비율을 낮추는 것을, 박근혜 정부(2013~2016년)의 4차례는 국가채무 비율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등 모두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작성된



4차례는 모두 국가채무 비율이 중기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특히 2019년 계획에서 5년간 국가채무 비율이 9.3%p나 증가하도록 국가재정을 운용한다고 발표하여 재정건전성에 대한 큰 우려를 낳았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2020년 계획에서는 14.8%p로 재정악화 규모가 오히려 더 커졌다. 적어도 국가채무 비율이 60%에 도달할 때까지는 재정건전화 정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적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재정악화와 재정성과, 그리고 재정위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내년까지 4년 동안 총지출이 155조원 증가하여 박근혜 정부 4년간 59조원의 2.7배에 달한다. 지출 분야별로 구분해서 보면, 복지 분야(사회복지, 보건) 지출 증가 규모가 32조원에서 70조원으로 커졌고, 경제 분야(SOC, 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농림·수산·식품)도 2조원에서 28조원으로 늘어났다. 일반 및 지방행정 분야도 8조원에서 23조원으로 늘었다. 결국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지출 증가를 억제하던 과거와 달리 복지, 경제, 지방 등 세 마리의 토끼를 모두 쫓다 보니 중앙정부 지출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재정적자 100조원 시대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앞으로 재정위기에 봉착할까? 그 답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재정지출이 과연 정책적 성과를 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재정지출이 급증하면 즉각적인 재정수지 악화와 국가채무 증가를 초래한다. 그러나 늘어난 재정지출이 경제성장률을 상승시킨다면 재정수입과 재정수지가 개선되고 국가채무 축소라는 간접효과가 가능해진다. 또 추가적인 재정확대 필요성이 감소하고 오히려 지출감축과 수입

증대라는 재정건전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경제-재정 선순환이 일어난다. 반면, 급증한 재정지출이 긍정적인 경제적 성과를 창출해 내지 못한다면 이러한 간접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추가적인 재정확대가 필요해지고 경제침체로 재정수입이 더 감소하는 등 국가재정-국민경제가 악순환에 빠지게 되면 이때 '재정위기'가 초래될 것이다.

그런데 최근 건전성이 훼손될 정도로 지출이 계속 급증하는데도 좀처럼 경제성장, 일자리, 소득재분배, 국민 삶의 질, 사회통합 등 재정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어 걱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추산 결과에 따르면 총 55조원에 달하는 3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에 따른 경제성장률 상승효과는 0.5%p에 그쳐 금년도 성장률 하향조정 폭(한국은행 전망치 기준 3.6%p, 2.3% → -1.3%)에 비해 매우 미미하다. 천문학적인 일자리 예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화된 3월~7월 중에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월평균 34만명이나 감소했다. 4~6월 중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5월에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소득지원 덕택으로 4.8% 증가하기는 했지만,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근로소득(-5.3%), 사업소득(-4.6%), 재산소득(-11.7%)이 모두 동반 감소하였다. 막대한 복지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한편,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21조원이나 포함되어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까지 총 160조원(국비 114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런데 제3회 추경에 포함되었던 5.1조원 규모의 관련 예산사업들을 분석한 국회예산처 정책에 따르면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직접 기여하여 재정투입의 선순환 구조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계획이 부실하거나 사업효과가 불확실한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되었다. 짧은 추경안 편성 기간으로 인해 한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지 말고 사업의 적정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국회의 엄정한 예산심의와 더불어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 재정위기에 빠지지 않고 경제-재정 선순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판 뉴딜 예산사업들이 의도하고 있는 정책적 성과를 창출해 내야만 한다.

향후 건전성 회복을 위한 재정관리 강화 방안

과거 경제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국가재정이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했었고 위기극복 이후에는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시키려는 정부와 국회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 외환위기 극복 이후 정부는 국회 심의를 거쳐 '공적자금 상환대책'을 마련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이후에는 2010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을 당초 계획의 1/3 수준으로 억제해 정부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가 이를 통과시켰던 경험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재정상황이 매우 엄중한 만큼 정부는 물론 정치권도 여야를 불문하고 또 다른 위기에 봉착하기 전에 우리 재정을 다시 정상화하는 데 온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코로나19의 진전 상황을 보아가며 행정부와 입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할 재정건전성 회복 등 재정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방안을 조언해 본다.

우선 느슨해진 거문고의 줄을 팽팽하게 고쳐 매는 것처럼 재정을 '경장(更張)'해서 무너진 재정규율을 다시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에 대해 한도를 설정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하는데, 그동안 검토하고 있다던 정부는 이번 예산안 발표에서 계속 '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정치권에서 나서서 꼭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야 한다. 중장기 재정총량 목표는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에서 조만간 발표할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감안해 결정하면 될 것이다.

또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만드는데 왕도는 없다. 세출 증가 속도를 제어하는 동시에, 세입을 확충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세출 측면에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 Top-Down 예산 제도, 재정성과관리제도 등 행정부의 재정운용 체계의 효과성을 재검점하는 한편, 이에 상응하도록 국회의 예산 심의 체계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세입 측면에서는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른 5년간의 세수효과가 2017년 +23.6조원에 달하였지만 2018년 -8.9조원, 2019년 -0.5조원, 2020년 +0.1조원 등 이후 증세가 아니라 감세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2019년 20.0%까지 상승하였던 조세부담률이 내년 18.7%로 하락하게 되었다. 조세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재원조달이고 재정적자 100조원 시대임에도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입 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지속 추진”하겠다는 선언적인 문구만 포함되어 있을 뿐 세입 확충 전략이나 구체적인 방안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조속히 중장기적인 세입 확충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재정총량 관리 강화와 더불어 정책성과 창출을 위한 개별 예산사업 관리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가능한 한 국민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고 국가재정을 운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략적 지출검토(Strategic Spending Review)'를 도입하고, 복지정책의 가성비를 높이는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등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등 보다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부부처와 정치권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경제·재정전문가, 관련 전문기관과 시민단체가 나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1990년 이후 총 25차례의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회복시키지 못하고 국가채무만 GDP 대비 248%에 달하게 만든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자꾸 국가재정만 동원하는 단기 미봉책의 경제대책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이번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과 사회통합 전략까지 아우르는 큰 그림 하에서 국가재정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는 시급한 정책적 과제를 바로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협력하여 각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툭아보다 : 살살이 훑어 나가면서 살피다

코로나 극복, 선도국가 2021년 예산안 주요 내용

우상희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woosh@kpfis.or.kr)

◎ 최근 9월 3일, 정부는 2021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함



◎ 분야별 자원 배분

(단위: 조원, %)

구분	2020년 본예산 (A)	2021년 예산안 (B)	증감 (B-A)	증감률
				(%)
총지출	512.3	555.8	43.5	8.5
1. 보건·복지·고용	180.5	199.9	19.4	10.7
2. 교육	72.6	71.0	-1.6	-2.2
3. 문화·체육·관광	8.0	8.4	0.4	5.1
4. 환경	9.0	10.5	1.5	16.7
5. R&D	24.2	27.2	3.0	12.3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3.7	29.1	5.4	22.9
7. SOC	23.2	26.0	2.8	11.9
8. 농림·수산·식품	21.5	22.4	0.9	4.0
9. 국방	50.2	52.9	2.7	5.5
10. 외교·통일	5.5	5.7	0.2	4.3
11. 공공질서·안전	20.8	21.8	1.0	4.4
12. 일반·지방행정	79.0	86.5	7.5	9.5

◎ 10대 중점 프로젝트

1 한국판 뉴딜 본격추진을 위한 투자

- 디지털 뉴딜(7.9조원)
- 그린 뉴딜(8.0조원)
- 안전망 강화(5.4조원)



21.3 조원

2 200만개 이상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 창출하는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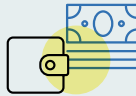
- 고용유지 46만개(1.2조원)
- 청년·중장년·소상공인 일자리 57만개 (4.3조원)
-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103만개 (3.1조원)



8.6 조원

3 지역사랑상품권, 소비쿠폰 등 20조원의 민간소비 창출

-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할인·발행지원(1.3조원)
- 4+4바우처·쿠폰(0.5조원)



1.8 조원

4 혁신도시, 지역소멸대응 등 국가균형발전 본격투자

-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등 지역발전
투자(11.8조원)
- 지역인재·특화산업 등 지역경제 활력(0.4조원)
-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2.3조원)
- 지방채 인수 등 지방재정 보강(5.1조원)



16.6 조원

5 혁신적 뉴딜투자펀드 조성

-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 스마트대한민국펀드
- 미래환경산업펀드



1.0 조원

6 기업 유동성·신성장 투자를 위한 정책금융 73조원 공급

- 투자자금 8.6조원 공급(재정소요 2.3조원)
- 융자자금 36.7조원 공급
(재정소요 30.0조원)
- 보증자금 27.6조원 공급
(재정소요 1.6조원)



33.9 조원

7 일자리·주거·금융·교육 등 청년 희망패키지 투자

- 구직부터 취·창업까지 전 단계
일자리 지원(3.9조원)
- 주거·금융·자산형성 등 생활안정(12.3조원)
- 교육사다리, 청년맞춤형 복지(4.5조원)



20.7 조원

8 생계·의료·주거·교육 4대 사회안전망 확충

- [생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5.5조원)
- [의료] 취약계층 건강·의료보장 확대 등(18.7조원)
- [주거]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21.0조원)
- [교육] 고교무상교육 전면실시 등
(1.7조원)



46.9 조원

9 K-방역, 자연재해예방,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 K-방역 고도화·산업화·세계화(1.8조원)
- 풍수해·산사태·하천·댐 관리 등
수해예방(2.6조원)
- 교통안전 환경개선·산재예방·
정신건강 등 국민생명지키기(2.7조원)



7.1 조원

10 국민생활환경 청정화 3대 프로젝트

- 미세먼지 저감 등 깨끗한 공기(1.3조원)
- 먹는 물 안전관리 강화 등 맑은 물(1.1조원)
- 도시숲, 자원순환 촉진 등
녹색생활 공간조성(0.6조원)



3.0 조원

'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규모 총 7.8조 원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3.8조 원
(377만명)

☑️ 소상공인 경영안정·재기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3.3조 원

☑️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신용·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긴급경영자금 융자)

0.5조 원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1.4조 원
(119만명)

☑️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조 원

☑️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0.1조 원

☑️ 실직자지원

(구직급여·코로나극복 일자리)

0.3조 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0.4조 원
(89만명)

☑️ 생계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0.4조 원

☑️ 근로 빈곤층 자활사업
(내일 키움 일자리)

0.03조 원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 등

2.2조 원
(아동특별돌봄 532만명, 통신요금 4,640만명 등)

☑️ 아동 특별돌봄 지원

1.1조 원

☑️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0.1조 원

☑️ 이동통신요금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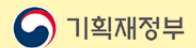
0.9조 원

☑️ 목적예비비

0.1조 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패키지



전체	지원프로그램	지원 규모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3.2조원 (291만명)
	일반업종 ☒ (전국 소상공인) 음식점, 300인 미만 학원, 목욕탕, 실내결혼식장 등	2.4조원 (244만명)
	집합금지업종 ☒ (전국 소상공인)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대학학원(300인 이상), 뷔페 등 고위험시설 9종 (5.8만명) ☒ (수도권)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학원 (10인 이상),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9.2만명)	0.3조원 (15만명)
	집합제한업종 ☒ (수도권) 당·주점업, 프랜차이즈형 커피숍, 아이스크림점 등	0.5조원 (32만명)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 폐업 소상공인 대상 50만원 지급 * 취업·재창업 관련 온라인교육 이수시	0.1조원 (20만명)
	1·2단계 금융지원	- (59만명)
	소상공인 1단계 금융지원 ☒ PC방, 노래연습장 등 피해업종 대상 최대 1,000만원(2%) 대출 ⇒ 자신보 예비자금 0.9조원 공급	- (9만명)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 ☒ 전체 소상공인 대상 최대 2,000만원 (2% 후반~ 4% 후반) 대출 ⇒ 미집행액 9.4조원 공급	- (50만명)
	소계 (현금 3.3조원 + 금융 10.3조원)	3.3조원 (370만명)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긴급경영안정자금)	0.3조원 (2,250개사)
	일반업종 ☒ 은행권 접근이 어려운 영세 中企 대상 평균 1.6억원 (2.15%) 대출 ⇒ 긴급경영안정자금 0.2조원 공급	0.2조원 (1,250개사)
	집합금지업종 ☒ 집합금지 대상 소상공인 이상 규모 기업에 평균 1억원 초저금리(1.5%) 대출 ⇒ 긴급경영안정자금 0.1조원 공급	0.1조원 (1,000개사)
	※ 기존 정책자금 가용재원 1조원 활용, 추가지원 가능	
	※ 1조원 수준 (6,250개사)	
	금융기관 보증	0.19조원 (8,200개사)
	신용보증기금 ☒ 공연·관광업 등 내수위축 피해 中企 대상 평균 3.05억원(평균 2.8%) 대출 ⇒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1.6조원 공급	0.12조원 (5,200개사)
	기술보증기금 ☒ 수출·벤처 등 기술 中企 대상 평균 3.05억원 (평균 2.8%) 대출 ⇒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0.9조원 공급	0.07조원 (3,000개사)
	소계 (금융 2.8조원)	0.5조원 (1만개사, 7만명)
합 계 (현금 3.3조원 + 금융 13.1조원)		3.8조원 (377만명)

* 정책대상: 소상공인 338만개사, 중소기업(소상공인 규모 이상) 60만개사

정책 연구는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발간하는 정책 연구 보고서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섹션입니다. 이번 호에서 소개할 보고서는 지난 8월 발간된 「dBrain 기반 재정성과관리 지원 강화방안」(박정수 부연구위원),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와 경기조정」(김명규 부연구위원)입니다. 자세한 보고서는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kpfis.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dBrain 기반 재정성과관리 지원 강화방안

박정수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mymajesty@kpfis.or.kr)

1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재정성과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하 dBrain) 내에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다. 재정성과관리제도란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정을 사업 단위로 분류하고, 집행결과를 평가하여 재정운영에 환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정보를 표준화, 전산화하여 저장 및 관리하는 인프라로서 dBrain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성과관리시스템은 구축 이후 운영과정에서 여러 한계를 노출했다. 첫째는 성과정보의 활용 부진이다. 성과정보를 예산과정 등으로 사용하는 편익은 낮은 반면, 성과정보 생산을 위한 업무는 형식화되어 업무 부담으로만 인식되고 있다. 둘째, 성과관리시스템의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제약이다. 현행 시스템은 재정여건 변화에 대한 적시 대응, 정책의사결정을 위한 다양한 재정정보 수요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dBrain 구축 이후 구축된 타 부처의 성과관리시스템과의 연계가 미진하여, 정보 활용에 필수적인 표준화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 분석 방법

정책의사결정에 필요한 성과정보를 정책당국에 제공하고,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공개하여 성과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dBrain 성과관리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내외 현황을 조사, 비교하여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dBrain과 개별 법령에 따라 구축된 주요 재정성과관리제도 및 성과관리시스템 등의 국내 사례, 국제기구의 정책권고, 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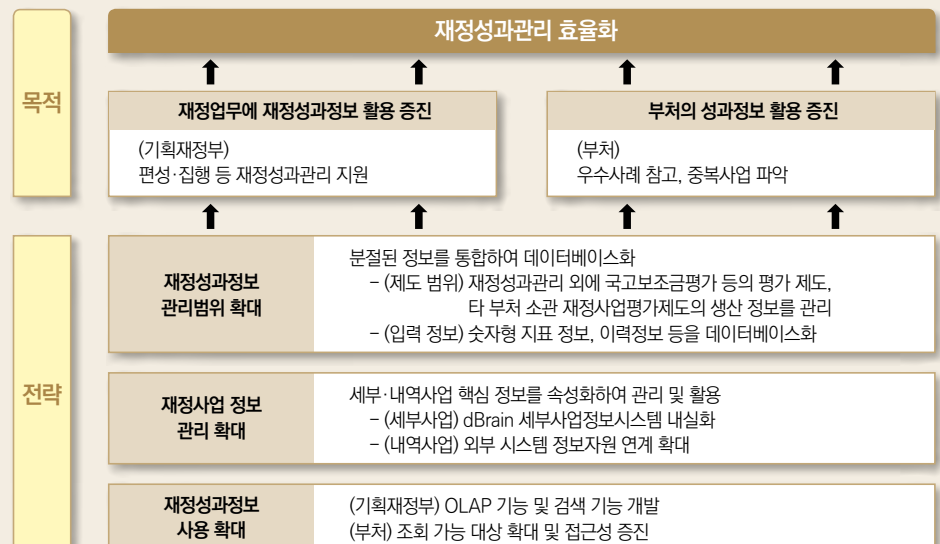
국 재정성과관리 제도 개선 및 시스템 운영 동향 등 해외 사례를 조사·분석했다. 이를 통해 3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dBrain 재정성과정보 관리 범위 확대이다. dBrain 외에 존재하는 성과관리시스템과 dBrain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각종 사업 평가 결과를 dBrain 데이터베이스에 확충해야 한다. 둘째, 정보 거버넌스 확립이다. 성과정보의 입력, 관리,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를 개선하여야 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은 재정정보 공개 강화다. 보고서 형태로만 공개되고 있는 성과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시각화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기 쉬운 형태로 전달해야 한다.

3 장기적 개선 방향

재정성과정보, 재정사업정보의 생산 과정과 저장 방식을 표준화하여 관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해외 선진국에서도 우수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성과정보시스템의 개선과 아울러 각 부처 간의 정보 생산과 관리, 활용에 있어서 합의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dBrain 성과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해, 예산 편성, 성과관리 등 재정관리 전반을 성과정보를 바탕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 재정당국의 입장에서는 재정성과관리제도의 합리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다. 그리고 개별 성과관리 담당부처 관점에서는 각종 시스템의 서류 작성 및 자료 입력 부담을 경감하고 정보 활용을 증진할 수 있다. 또한 대국민 관점에서 성과 중심 재정정보 공개를 통해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그림. dBrain 재정성과정보 관리 범위 확대 방향



자료: 박정수(2020), 「dBrain 기반 재정성과관리 지원 강화방안」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와 경기조정

- dBrain 자료를 이용하여 -

김명규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mkim@kpfis.or.kr)

1 연구 배경 및 목적

경제주체는 경기변동이 크면 미래에 대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기변동을 선호한다. 정부는 경기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통화량을 조절하는 통화정책과, 재정수입·지출을 조절하는 재정정책을 활용한다.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조정은 경기변동에 자동적으로 대응하는 자동안정화장치 관련 제도를 통한 방식과 재량적 대응 방식이 있다. 그중 자동안정화장치는 정부가 경기 안정화에 매번 대응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경기 안정화 기능을 하는 재정 제도를 통칭한다. 2020년 4월 IMF에서도 발표하였듯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와 같이 미래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는 경기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자동안정화장치의 경기대응성을 제고하여 내재적 대응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자동안정화장치의 규모를 분석하고, 재정의 경기대응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는 중앙정부의 자동안정화장치 규모 분석을 위해 dBrain의 통합재정수지 세분류 자료를 활용하여 일부 선행연구에서 누락한 자료를 보완하여 분석하였다.

2 자동안정화장치 효과 분석 결과

자동안정화장치의 효과는 분석 범위와 측정 방식에 따라서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다양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정부 범위는 중앙정부와 일반정부로 구분하였고, 각각 dBrain의 통합재정수지 자료와 OECD Economic Outlook Database를 활용하였다. 측정 방식에는 총괄법과 분할법이 있으며, 총괄법은 경기변동이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만을 분석하는 반면, 분할법은 경기변동이 재정수입과 지출 세부 항목에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해 분석한다.

우리나라의 자동안정화장치 규모(전 기간 평균)를 분석한 결과, 분할법 기준으로는 중앙정부 0.297, 일반정부 0.323이며, 총괄법 기준으로는 중앙정부 0.225, 일반정부 0.271이다. 일반정부가 더 큰 이유는 일반정부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비영리 공공기관까지를 포괄한 범위이기 때문이다. 분할법 결과가 더 큰 이유는 △총괄법은 지출의 경기변동에 대한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분할법의 경우 수입항목의 탄력성이 더 민감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연도별 자동안정화장치 규모(분할법 기준)는 작게는 0.270(2010년)에서 2014년부터 빠르게 증가하여 최근 0.347(2018년)로 확대되었다. 이유는 △2012년 이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¹, 최고과표 하향조정², 최고세율 인상³ 등 소득세 누진도를 확대한 소득세법 개정이 반영되었고, △2014년 이후 법인세에 대한 자본소득 평균 유효세율의 상승 추세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OECD 비교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우리나라 자동안정화장치 규모는 연평균(1985~2018년) 1.45% 증가하며, OECD(평균 0.11% 증가) 25개 회원국 중 2위의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빠른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OECD 평균 대비 낮은 원인으로는 △재정규모가 작고, △경기에 민감한 수입·지출 항목 비중이 작으며, △조세의 누진도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3 재정의 경기대응성 제고 방안

자동안정화장치의 경기대응성을 제고하는 방안은 수입 측면과 지출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수입 측면에서 경기대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기변동에 대해 민감한 조세 항목의 비중을 높이고 조세의 누진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조세 개편에 따른 국민의 수용성과 실효성을 고려할 때 실제 제도화까지는 사회적 합의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지출 측면에서는 실업급여제도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경기대응성을 제고할 수 있다. 첫째, 구직급여 지급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둘째, 구직급여 상한액의 조정을 통한 실질 소득대체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평균임금 대비 상한액 비율은 2018년 42.0%로, OECD 회원국 중 하위 4번째인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므로 최근 빠르게 증가하였다. 셋째, 탄력적 실업급여 제도 중 하나인 특별연장급여 제도를 활성화하여 경기대응성을 높이는 것을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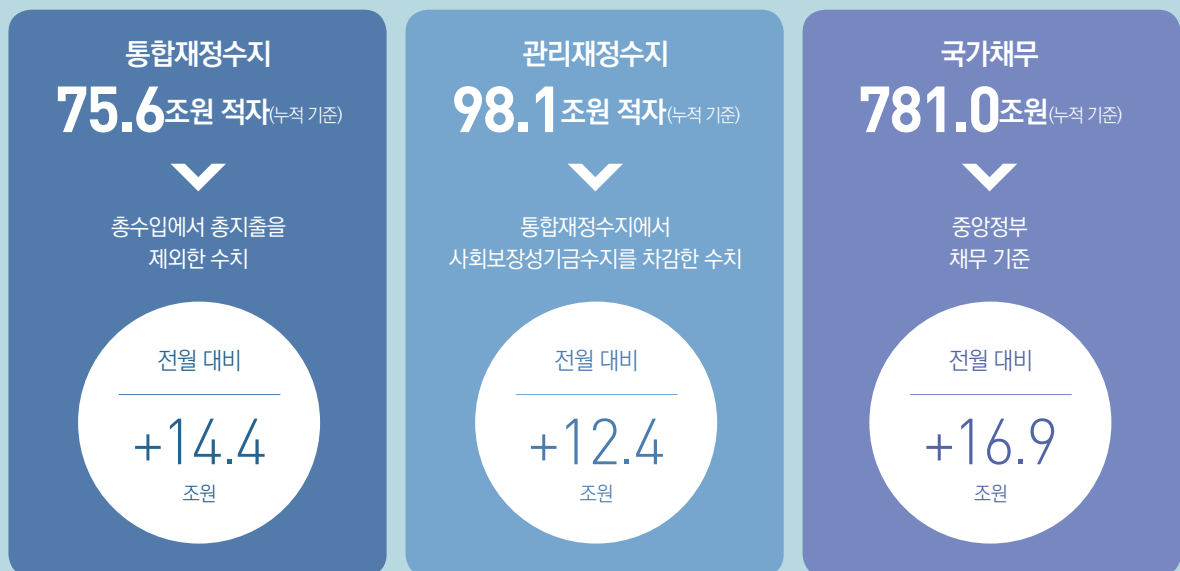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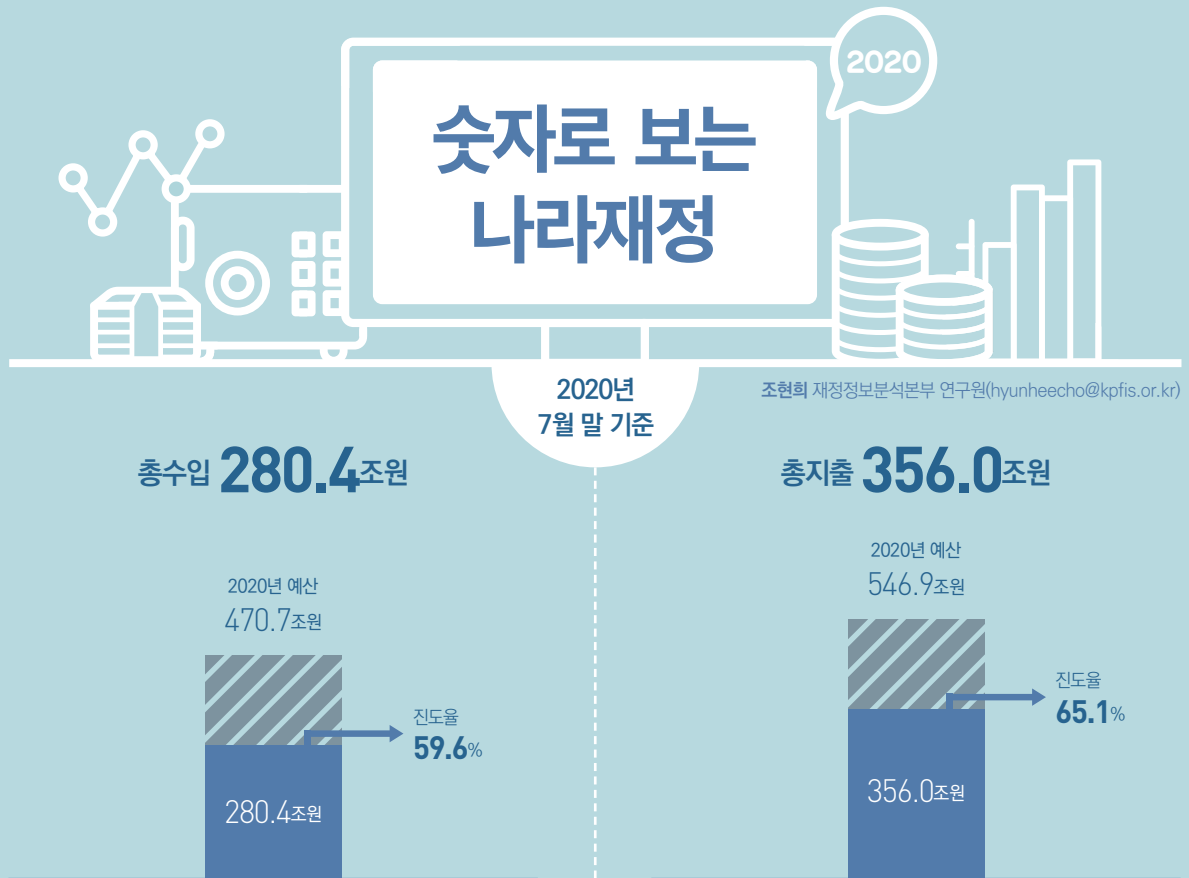
자동안정화장치는 아니지만 신속성·자동성 때문에 자동안정화장치와 유사한 경기대응 효과를 내는 해외 재정제도 중에서 기금과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일본과 영국의 예비비 사례를 차용할 경우 예비비를 일반예비비와 경기대응을 위한 목적예비비로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해야 하고, 예산의 예비비 편성 한도(1%)를 늘려 예측 불가한 상황에서 경기대응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의 경기불황대비기금(Rainy Day Fund : RDF)⁴과 같은 기금을 신설해 경기변동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¹ 2014년 보장성 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다.

² 2014년은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3억원 초과에서 1억 5천만원 초과로 하향조정했다.

³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2년 35%→38%, 2017년 38%→40%, 2018년 40%→42% 인상되었다.

⁴ 미국은 경기침체 상황에 대비하여 모든 주 정부가 경기불황대비기금(Rainy Day Fund : RDF)을 두어, 재정수지 흑자 시기에는 기금을 적립하고 경기불황 시 경기회복 목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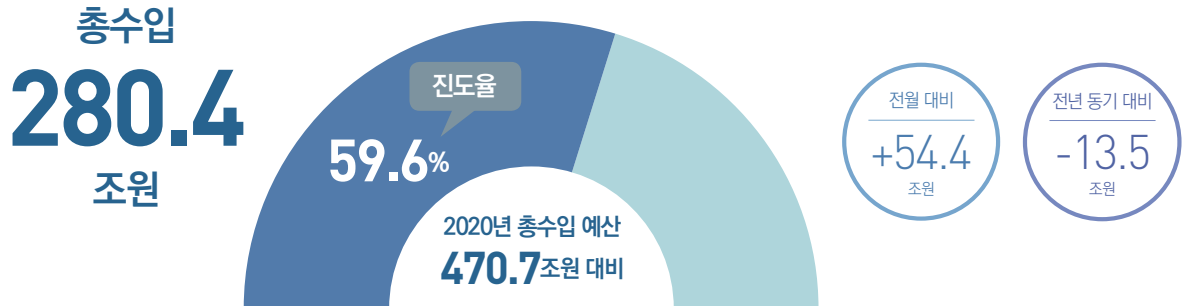
주 1) 2020년 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 구성항목별 합계는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0.9.

총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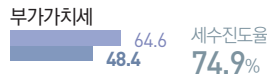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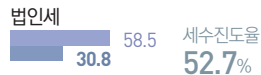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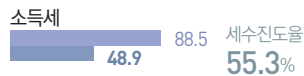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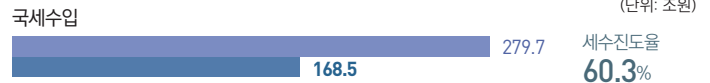
• 2020년 7월 말 기준



주 1) 총수입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 예산 대비 당월 누계 총수입 규모의 비율을 의미

2) 2020년 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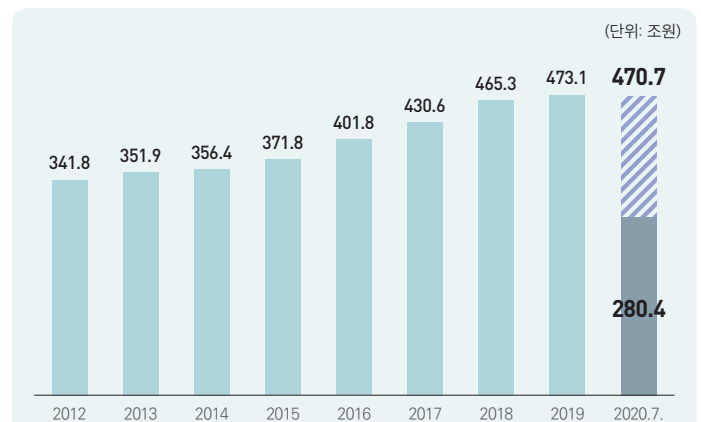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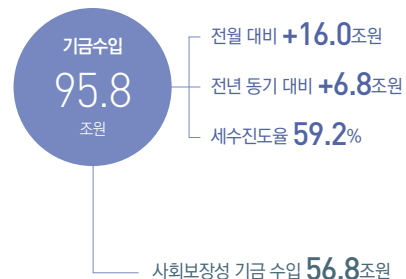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 2020년 예산
■ 2020년 7월

주 1) 세수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 대비 당월 누계 세입 규모의 비율을 의미

2) 2020년 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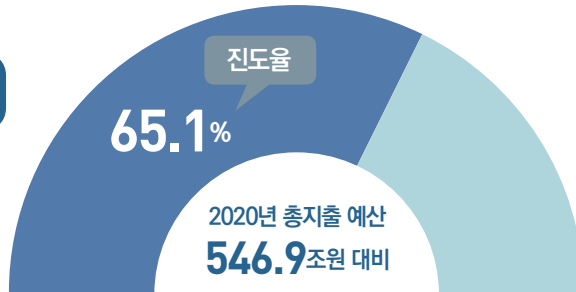
주: 2019년까지는 결산, 2020년 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총 지출

• 2020년 7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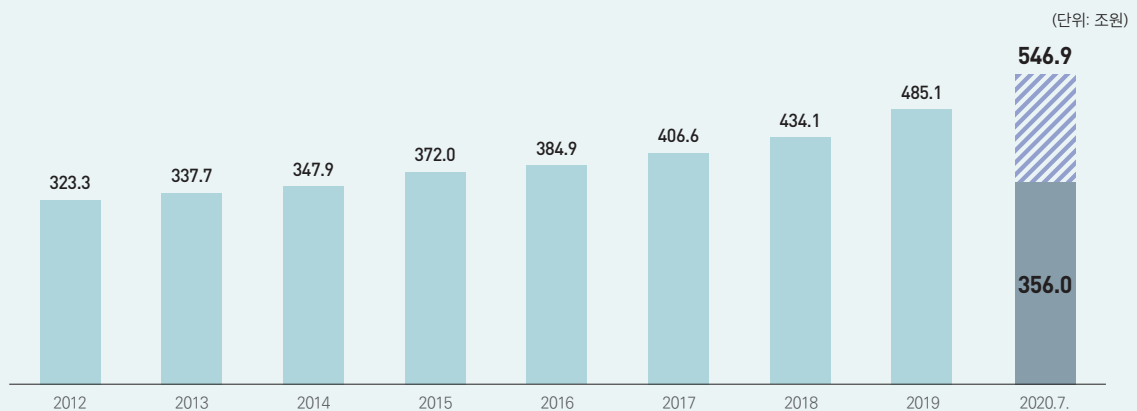
총지출
356.0
조원



주 1) 총지출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총지출 예산 대비 당월 누계 총지출 규모의 비율을 의미

2) 2020년 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주: 2019년까지는 결산, 2020년 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

연간계획 대비 **71.7%**



* 추경, 기금 및 공공기관 계획 변경 등 반영으로 연간계획 변경(305.5조원 → 308.8조원)



상위 5개 부처

(누적 기준)

(단위: 조원, %)

	부처명	상반기 실적	집행률
1	중소벤처기업부	12.3	87.0
2	산업통상자원부	6.6	83.7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4	79.1
4	보건복지부	16.6	78.8
5	고용노동부	4.9	77.8

주 1) 주요 관리대상사업은 45개 중앙행정기관과 39개 기금, 33개 공공기관의 인건비, 기본경비, 보전지출, 내부거래를 제외한 주요사업비에 해당
(「국가재정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2) 집행률은 해당 연도의 연간 계획 대비 당월 누계 실적 규모의 비율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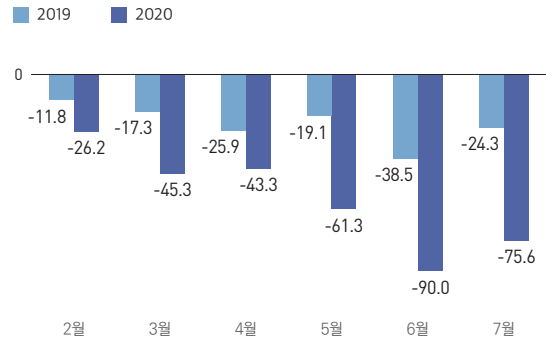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재정수지

• 2020년 7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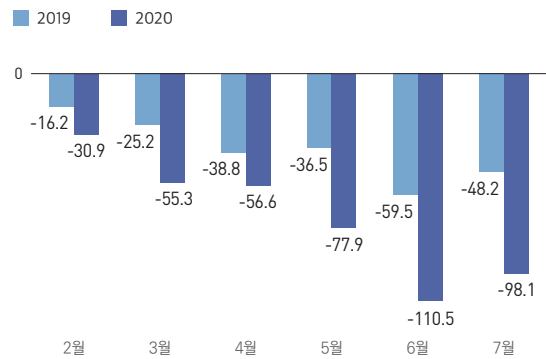
통합재정수지

75.6조원 적자



관리재정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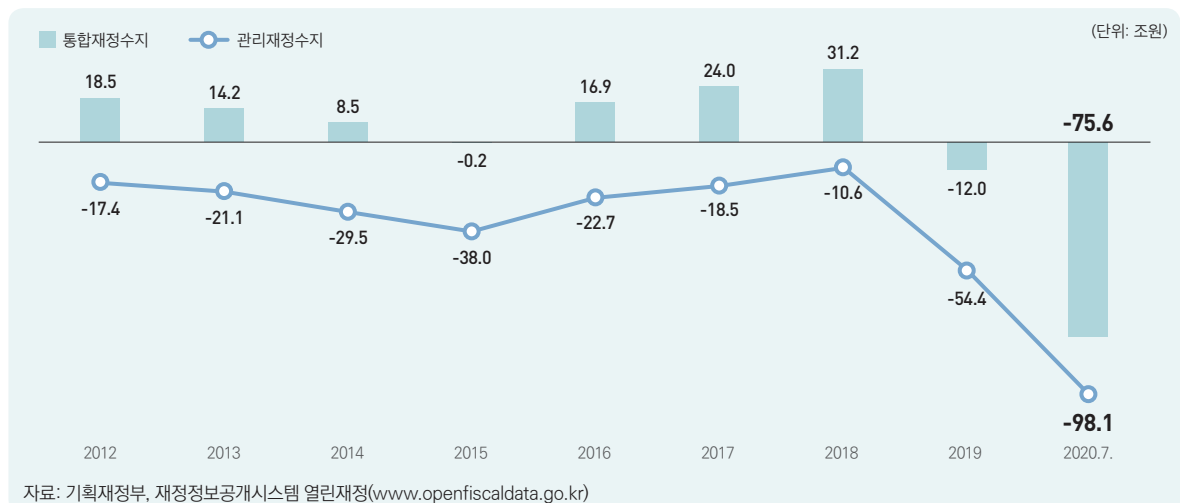
98.1조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

22.5조원 흑자

- 주 1)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
 2)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4개 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
 3)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산출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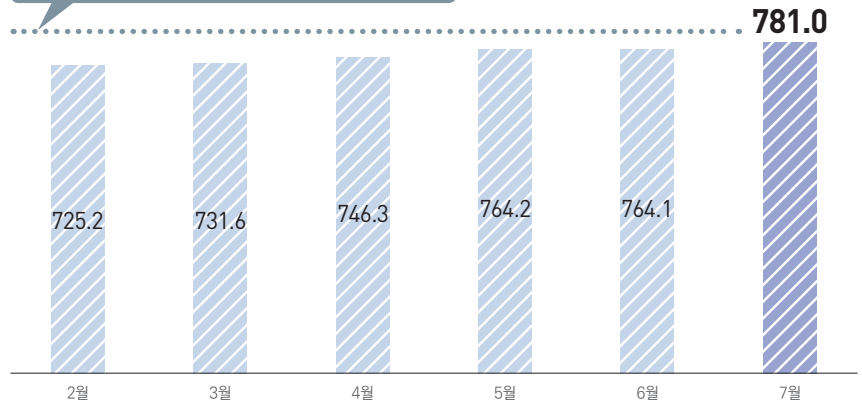
국 가 채 무

• 2020년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781.0조원

2020년 예산 기준, 중앙정부 채무 807.4조원



전월 대비

+16.9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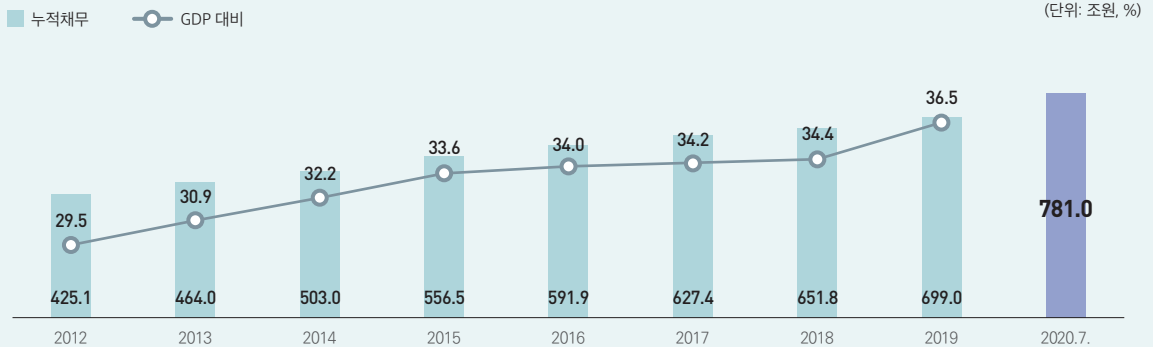
전년 대비

+82.1

조원

주 1)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로 구성. 현재 지방정부 채무 통계는 결산기준으로 연 1회 산출되므로 월별 추이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공개함(2018년 국가채무는 680.5조원이며, 그중 지방정부 채무는 32.7조원임)
2) 2020년 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주 1) 중앙정부 채무 기준

2)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

3) 누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은 정부의 예산, 집행, 결산에 대한 재정통계 및 시각화 자료와 재정 관련 보고서, 간행물 등 다양한 재정정보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는 종합 재정정보공개 플랫폼입니다.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요 재정통계를 「열린재정」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

전규식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gsjeon@kpfis.or.kr)

연기금투자플

연기금투자플이란 부족한 개별 연기금의 자산운용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여러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연기금투자플에 대한 정보를 「열린재정」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의·웹툰

알기 쉬운 재정 > 재정배움터 > 재정교실 > 연기금투자플
알기 쉬운 재정 > 재정배움터 > 재정웹툰 > 연기금투자플

알기 쉬운 재정 > 재정배움터 > 재정교실 > 연기금투자플에서는 연기금투자플에 대한 소개, 투자플운영위원회, 법령 및 규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재정 > 재정배움터 > 재정웹툰 > 연기금투자플에서는 연기금투자플의 도입 시기, 배경, 상품구성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재정교실	재정웹툰
재정이란? 예산 및 기금 국유재산 연기금투자플 국고 부채 국채 조세 회계결산 주요재정제도	연기금투자플소개 투자플운영위원회 법령 및 규정

연기금투자플 소개

연기금투자플 제도란?

■ 도입배경

’99년도 기금운용평가(38개 기금의 자산관리부문)에서 기금의 자산운용 문제점이 크게 지적(OO.8월)

기금의 자산운용정책이 부재하고 자산운용 담당인력의 전문성 결여
모든 기금이 과도하게 많은 운용지급을 장기예금 등 만기보 손충
자산운용시 위험·수익률 분석이 미흡하고 전문성 결여로 채권·주식 등 직접투자 부족
특정금융기관에 여유자금을 배타적 또는 우선적으로 배분하여 손충

이에 따라 기금 여유자금 운용의 규모의 경제 달성, 자산운용의 전문성 확보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제2차 기금행정협의회 (’01.8.23일)에서 연기금 투자플 제도 도입 결정

※ 투자플제도 도입 결정시 제시한 연기금투자플의 주요 목적

- 연기(자급)의 장기화, 다양한 투자(기) 확충 등을 통한 조율한 자산운용 도모
- 전문적인 투자(기)의 적용을 통하여 기금운용의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
- 개별기금별 자산운용에 따른 소요비용 절감
- 투자플이 주요 시장 참여자로서 역할 수행을 통해 국내금융시장 발전에 기여

한해 국가채정법 제81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에 연기금투자플의 설치 근거가 규정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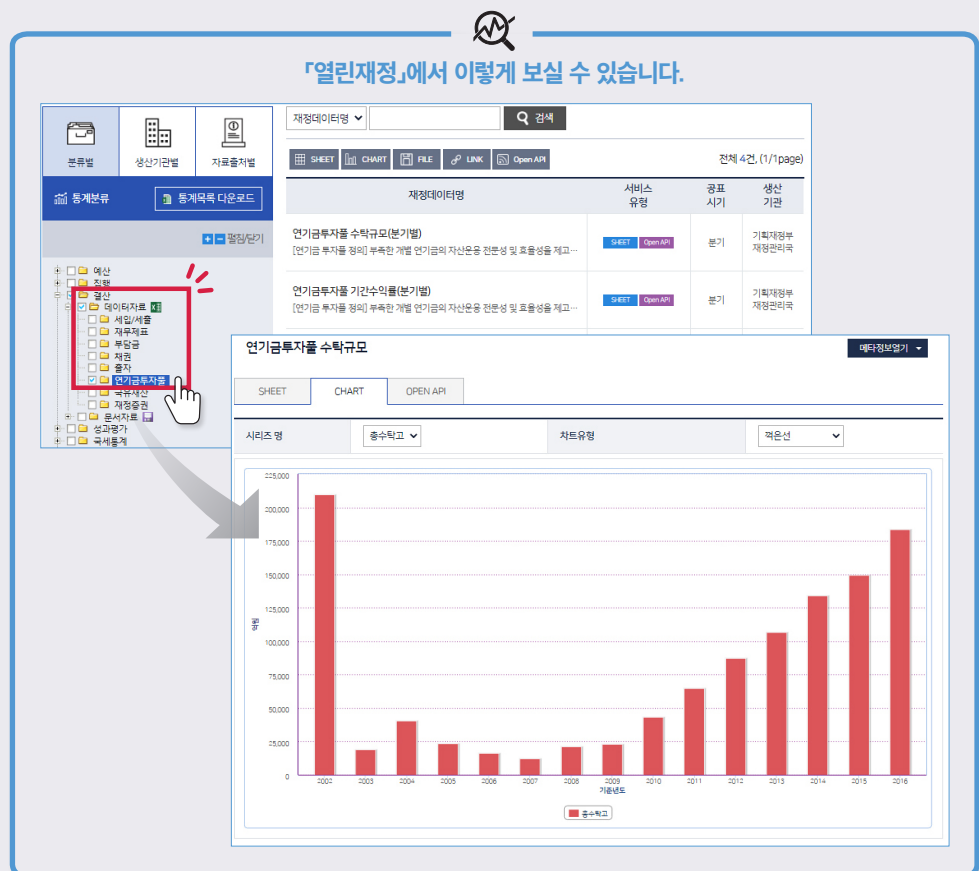
2 회계연도별 추이

상세재정통계DB > 결산 > 데이터자료 > 연기금투자자 > 연기금투자자 수탁규모
상세재정통계DB > 결산 > 데이터자료 > 연기금투자자 > 연기금투자자 기간수익률

먼저, 연기금 투자자의 회계연도별 추이는 상세재정통계DB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세재정통계DB > 결산 > 데이터자료 > 연기금투자자 > 연기금투자자 수탁규모의 CHART탭을 선택하면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연기금투자자의 총 수탁고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SHEET 창에서는 총 수탁고의 세부사항(MMF 금액(억원), MMF 비중(%), 채권형 금액(억원), 채권형 비율(%), 혼합형 금액(억원), 혼합형 비율(%), 주식형 금액(억원), 주식형 비율(%), ELF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상세재정통계DB > 결산 > 데이터자료 > 연기금투자자 > 연기금투자자 기간수익률에서는 CHART탭을 선택하여 2002년부터 2016년까지 MMF 수익률, 채권형 수익률, 혼합형 수익률의 그래프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SHEET 창에서는 각 기준연도별 기간수익률의 세부사항(MMF 수익률(%), MMF 초과 수익률(%), 채권형 수익률(%), 채권형 초과 수익률(%), 혼합형 수익률(%), 혼합형 초과 수익률(%), 주식형 수익률(%), 주식형 초과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연기금투자자 수탁규모 메타정보열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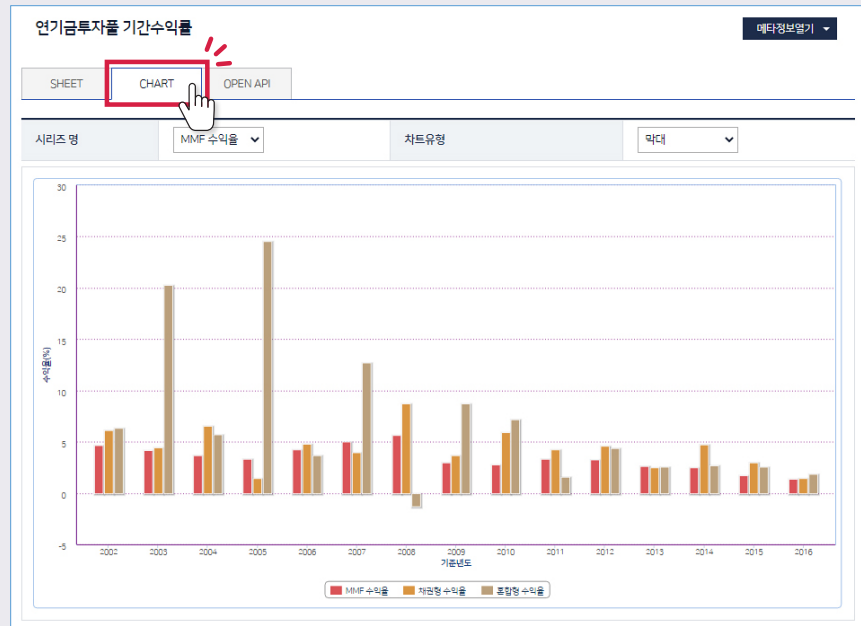
SHEET CHART OPEN API

기준년도 선택 Q 조회

※월별명령을 클릭하면 데이터 정렬이 가능합니다 (▲오름차순 / ▼내림차순)

No	기준년도	총수탁액	MMF 금액(억원)	MMF 비중(%)	재관형 금액(억원)	재관형 비중(%)	혼합형 금액(억원)	혼합형 비중(%)	주식형 금액(억원)	주식형 비중(%)	ELF
1	2016	209,544	32,447	15.48	102,522	48.93	72,708	34.7	1,867	0.89	
2	2015	183,655	26,970	14.69	83,433	45.43	72,328	39.38	924	0.5	
3	2014	149,382	21,238	14.2	69,844	46.8	57,545	38.5	754	0.5	
4	2013	134,235	29,091	21.7	65,170	48.6	39,516	29.4	458	0.4	
5	2012	106,695	19,471	18.3	58,824	55.1	27,950	26.2	392	0.37	
6	2011	87,502	13,783	15.8	43,023	49.2	29,889	34.2	571	0.7	
7	2010	64,721	18,836	29.1	30,719	47.5	14,262	22	458	0.7	
8	2009	43,372	15,417	35.6	21,116	48.7	5,867	13.5	582	1.3	
9	2008	23,039	5,873	25.5	8,666	37.6	7,675	33.3	514	2.2	
10	2007	21,216	3,104	14.6	13,147	62	4,552	21.5	213	1	
11	2006	12,255	2,883	23.5	8,339	68.1	919	7.5	104	0.9	
12	2005	16,331	4,535	27.8	11,043	67.6	576	3.5	49	0.3	
13	2004	23,383	9,089	38.9	11,348	48.5	654	2.8	51	0.2	
14	2003	40,474	13,213	32.7	25,552	63.1	1,587	3.9	21	0.1	
15	2002	18,829	9,802	52.06	7,233	38.41	1,794	9.53			

XML JSON XLS CSV TXT



연기금투자자 기간수익률 메타정보열기 ▼

SHEET CHART OPEN API

기준년도 2015 Q 조회

※월별명령을 클릭하면 데이터 정렬이 가능합니다 (▲오름차순 / ▼내림차순)

No	기준년도	MMF 수익률(%)	MMF 초과 수익률(%)	재관형 수익률(%)	재관형 초과 수익률(%)	혼합형 수익률(%)	혼합형 초과 수익률(%)	주식형 수익률(%)	주식형
1	2015	1.7	0.05	2.98	0.33	2.59	0.6	3.8	

XML JSON XLS CSV TXT

3 —————

분기별 데이터

상세재정통계DB > 결산 > 데이터자료 > 연기금투자자 > 연기금투자자 수탁규모(분기별)

상세재정통계DB > 결산 > 데이터자료 > 연기금투자자 > 연기금투자자 기간수익률(분기별)

또한, 상세재정통계DB에서는 연기금투자자의 수탁규모와 기간수익률에 관한 분기별 자료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세재정통계DB > 결산 > 데이터자료 > 연기금투자자 > 연기금투자자 수탁규모(분기별)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각 분기별 연기금투자자의 총 수탁고, MMF 금액(억원), 채권형 금액(억원), 혼합형 금액(억원), 주식형(국내) 금액(억원), 주식형(해외) 금액(억원) 등 총 6개의 데이터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세재정통계DB > 결산 > 데이터자료 > 연기금투자자 > 연기금투자자 기간수익률(분기별)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각 분기별 연기금투자자의 MMF 수익률(%), MMF 초과 수익률(%), 채권형 수익률(%), 채권형 초과 수익률(%), 혼합형 수익률(%), 혼합형 초과 수익률(%), 주식형(국내) 수익률(%), 주식형(국내) 초과 수익률(%), 주식형(해외) 수익률(%), 주식형(해외) 초과 수익률(%) 등 총 10개 데이터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연기금투자자 수탁규모(분기별)

메타정보보기 ▼

SHEET OPEN API

대상년도 2019 ▼

※월별명령을 클릭하면 데이터 정렬이 가능합니다 (▲오름차순 / ▼내림차순)

No	대상년도	분기	총수탁고	MMF 금액(억원)	채권형 금액(억원)	혼합형 금액(억원)	주식형(국내) 금액(억원)	주식형(해외) 금액(억원)
1	2019	4/4	229,939	62,362	82,819	78,417	2,473	2,048
2	2019	3/4	215,504	50,532	72,608	85,659	2,907	2,800
3	2019	2/4	207,790	50,742	63,934	86,931	3,012	2,091
4	2019	1/4	206,152	55,541	60,785	84,299	2,985	2,042

XML JSON XLS CSV TXT

연기금투자자 기간수익률(분기별)

메타정보보기 ▼

SHEET OPEN API

※월별명령을 클릭하면 데이터 정렬이 가능합니다 (▲오름차순 / ▼내림차순)

No	대상년도	분기	MMF 수익률(%)	MMF 초과 수익률(%)	채권형 수익률(%)	채권형 초과 수익률(%)	혼합형 수익률(%)	혼합형 초과 수익률(%)	주식형(국내) 수익률(%)	주식형(국내) 초과 수익률(%)	주식형(해외) 수익률(%)	주식형(해외) 초과 수익률(%)
1	2020	2/4	1.25	0.24	4.67	1.01	3.56	-0.08	18.69	-0.68	1.00	1.00
2	2020	1/4	1.45	0.11	2.65	-0.53	-2.49	-0.26	-19.53	0.29	-17.00	-17.00
3	2019	4/4	1.48	0.08	1	-0.03	1.32	0.09	7.78	1.12	6.66	6.66
4	2019	3/4	1.68	0.13	2.57	-0.04	0.39	0.01	-2.53	0.37	2.85	2.85
5	2019	2/4	1.87	0.13	3.59	0.08	0.94	0.03	-0.38	-0.01	4.77	4.77
6	2019	1/4	1.91	0.11	3.47	0.34	1.9	0.05	4.72	-1.05	12.00	12.00
7	2018	4/4	1.79	0.1	3.16	0.01	-1.79	-0.17	-11.83	1.05	-13.00	-13.00
8	2018	3/4	1.69	0.08	2.8	-0.06	0.75	-0.02	-0.16	-0.88	4.00	4.00
9	2018	2/4	1.69	0.1	2.9	-0.04	0.1	0.05	-4.31	0.57	0.00	0.00
10	2018	1/4	1.66	0.12	2.02	0.04	0.16	0.09	-1.73	-0.69	-1.00	-1.00
11	2017	4/4	1.43	0.1	0.07	-0.16	0.64	0.22	4.43	1.41	4.00	4.00
12	2017	3/4	1.29	0.04	0.5	-0.17	0.38	-0.12	0.65	0.44	4.00	4.00

XML JSON XLS CSV TXT

4 ————— 관련 정부정책 정보

연기금투자플 관련 보도자료 → 재정자료실 > 보도자료

연기금투자플에 관련된 정부의 정책을 보고 싶은 경우, 재정자료실 > 보도자료 '연기금투자플'을 검색하면 총 17건의 보도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총 17건 연기금투자플 검색 

제목	첨부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
연기금투자플 운영기관 선정기준 및 주관운용사 ...		재정제도과	2014-08-27	11
연기금투자플 운영기관 선정제도 개선		재정제도과	2013-09-13	6
연기금투자플 개별운용사 보수를 인하		재정제도과	2013-02-21	5
보도해영(연기금투자플 주식상장 수익률 관련)		재정제도과	2013-02-15	0
한국투자신탁운용(주)를 연기금투자플 주관운용사...		재정제도과	2012-12-28	0
연기금투자플 주관운용사 경쟁체제 도입		재정제도과	2012-11-08	2
(보도참고) 2011년 연기금투자플 운용실적		재정기획과	2012-01-27	1
연기금투자플 주관운용사 선정		재정기획과	2009-11-25	2
연기금투자플 개별운용사 유니버스 및 기타운영기...		재정기획과	2009-07-10	0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정책여론수렴시스템의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한 달 동안 '개인정보'의 언급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유출', '보안' 등도 연관어로 도출되었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이 8월부터 시행된데다, 이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이 커진것으로 보인다. 이번 호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재정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서영훈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youngseu@kpfis.or.kr)

이달의 이슈키워드

개인정보



연관어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유출

보안

개인정보수집

데이터

중국

광고

비밀

불법

해킹

지원

기업

방통위

교육

집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big.pr.go.kr), 수집기간: 2020.7.16.~8.15.(접속: 2020.8.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2020년 개인정보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가 '매우 중요하다' 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비율이 84.7%로 나타났다. 하지만, 막상 국민 개개인이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매우 잘 확인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고작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처리자¹의 경우 개인정보보호가 '매우 중요하다' 또는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공공기관 94.7%, 민간기업 83.6%로, 대부분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간기업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및 공개 비율이 49.5%(공공기관 99.4%)로 기본적인 보호조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 중요성 인식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0), 2020년 개인정보 연차보고서 재구성

지난 1년간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용이 26.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개인정보 유출(21.8%), 개인정보 도용(6.5%) 순이었다. 하지만, 개인정보 침해 후 69.1%가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아 개인정보 피해 구제조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권리 침해 경험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0), 2020년 개인정보 연차보고서 재구성

¹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의미한다.

²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수 있는 사람으로,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의미한다.



「개인정보보호법」

2020년 8월 5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³」이 시행되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등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환경을 지원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명정보 제도화, 개인정보의 합리화, 개인정보의 범위 명확화,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일원화 등을 담고 있다.

첫째, 가명정보를 제도화 시키기 위해 개인정보의 범위에 가명정보 개념을 포함시켰다. 또한, 가명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분석·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가명정보의 결합을 허용하되, 반드시 보안 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거치도록 엄격히 제한했다. 이는 가명정보가 다른 데이터와 무분별하게 결합할 경우 개인이 식별돼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개인정보의 합리화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활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때, 개인정보의 활용 여부는 안정성 확보 조치(암호화, 가명처리 등), 정보주체의 불이익 발생 등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셋째, 개인정보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판단기준으로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다른 정보와 결합을 하여도 더 이상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정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넷째,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일원화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조사 및 집행기능을 부여하는 등 독립성도 강화하였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중복 규제를 정비하고 법체계를 일원화하였다.

2020년 개인정보 관련 주요 재정사업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 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되, 데이터 활용은 활성화시킴으로써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재정사업을 2020년 예산에 담았다. 2020년에 개인정보 관련 주요 사업은 아래와 같다.

2020년도 개인정보 관련 주요사업 예산

소관

주요 사업

지출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육성 체계구축

3.5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

89.6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강화

96.7

(단위: 억원)

자료: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2020), 2020년 사업설명자료 재구성

▶ 개인정보 전문가 육성 체계구축

개인정보 전문가 육성 체계구축(3.5억원)은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국가 자격검정제도, △전문인력 지정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개인정보처리 및 유출사고에 대응할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를 양성하는 제도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서 법제도, 기술, 조직운영 등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분야 국가 자격검정제도도 도입된다. 이를 위해, 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시험 문제를 개발하는 한편, 문제은행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전문인력 지정제도는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전문지식을 보유한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를 지정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해외 트렌드에 맞는 제도 도입을 연구 중이다.

▶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89.6억원)는 개인정보 유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e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privacy.kisa.or.kr)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되었다. 센터를 통해 신고가 접수되면 정부가 개인정보를 침해한 당사자를 조사한다. 조사를 통해 법규위반 등이 적발되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있다.

e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eprivacy.go.kr)는 인터넷에서 회원가입, 실명확인, 성인인증, 아이핀 등과 같은 본인확인 내용을 통합 조회하는 서비스이다. 또한, 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탈퇴하기 어려움이 있는 웹사이트에 대한 회원탈퇴도 지원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privacy.go.kr)로 운영되고 있다.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소개, 개인정보 침해 사례, 개인정보 열람 요구, 분쟁조정과 개인정보 피해 예방방법 등 다양한 자료들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세대별, 사업장 개인정보보호 등과 같이 국민의 상황에 맞는 개인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 강화

개인정보보호 강화(96.7억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안전하게 정보를 이용하는 환경을 지원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자율규제 환경 마련,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등을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없는 클린 인터넷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온라인에 노출된 개인정보 탐지 및 삭제,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한 등을 실시한다.

3 「신용보호법」, 「정보통신망법」과 함께 데이터 3법으로 시행되었는데, 데이터 3법은 데이터에 가명정보를 도입하는것이 주요 골자이다.

한국경제보고서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0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가 지난 8월 11일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의 방역·위기 대응 및 경제성장을 종합평가한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0.8.11.)를 발표하였다. ① 거시경제 동향 및 정책, ② 고령화 추세를 반영한 고용 증대 및 양질의 제공, ③ 생산성 및 삶의 질(Well-Being) 향상을 위한 기술 확산 등이 담긴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우상희 재정분석기획부 연구원(woosh@kpfi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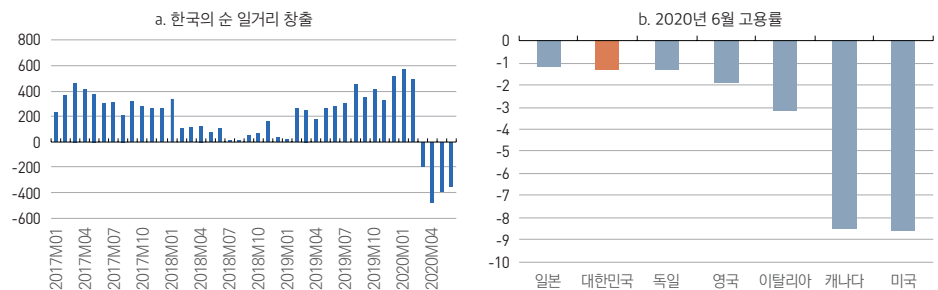


거시경제 동향 및 정책

코로나19 초기 발생국가 중 하나인 한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봉쇄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신속·효과적인 정책 대응을 통해 바이러스 확산을 통제했다¹. 이 덕분에 한국은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의 GDP는 2020년 1분기에 1.3%, 2분기에 3.3% 감소하였고, 고용은 올해 3월 이후 도소매·숙박·음식업 및 임시직·일용직 중심으로 크게 줄었다. 다만 그 하락폭은 캐나다와 미국보다 훨씬 낮은 모습을 보였다.

그림 1. 한국의 순 일거리 창출 및 2020년 6월 고용률

(단위: a. 천, 전년 동기 대비 / b. 전년 동기 대비 % 증감)



자료: OECD(2020), OECD Economic Surveys Korea, Figure 1.2(pp.17)

OECD는 2020년 연간으로도 한국 경제가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2차 확산이 발생할 경우(Double-Hit)와 발생하지 않는 경우(Single-Hit) 모두 다른 OECD 회원국보다 경제 하락 폭이 훨씬 작을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세계 무역 및 글로벌 공급망 약화 등에 따른 교역량 위축은 한국과 같은 수출 의존형 경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OECD는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가계와 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추가 소득 지원을 시행할 경우 저소득층에 집중할 것을 권고했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정부 부채는 40% 미만으로 주요국(G7) 평균(100% 이상)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2]. 한국의 건전한 재정은 경기 침체에 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은 있지만, 고정적인 지출을 수반하는 정책을 도입할 경우 확대 지출에 따른 파급효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장기적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공공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 수입을 증대할 것을 권고했다.

1. 한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전략

(입국금지 및 격리) 2020년 2월 초부터 중국 후베이성 출발한 여행객 입국 금지,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 14일 자가격리, 5월 11일부터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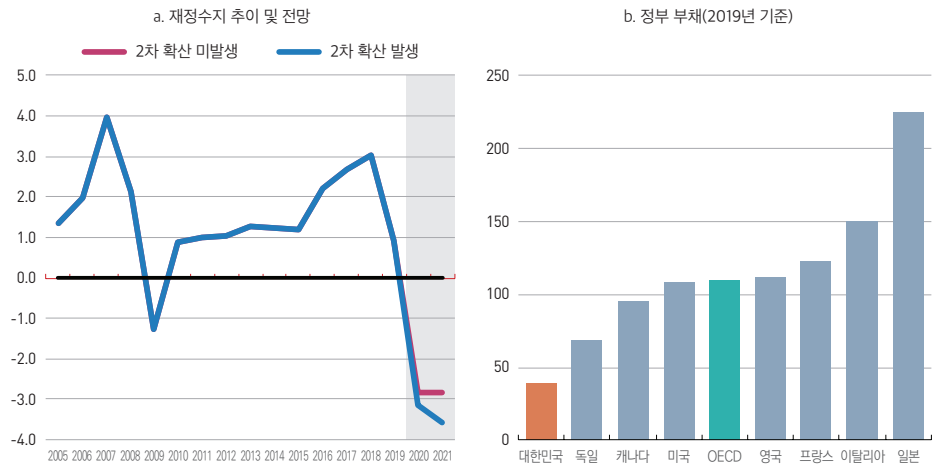
(검사) 신속한 진단 키트 개발과 함께 혁신적인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 검사, 방문(Walk-Through) 검사 등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하여 광범위한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8월 3일 기준으로 누적 160만건을 검사할 수 있었다.

(추적) 신용카드 결제내역, CCTV 녹화자료, 휴대전화 GPS 데이터를 활용하여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 조치 및 건강상태를 원격으로 점검했다.

(치료) 중증 환자는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고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입소하여 감염병 상황에 따라 의료자원을 조정하였다.

그림 2. 재정수지 추이·전망 및 정부 부채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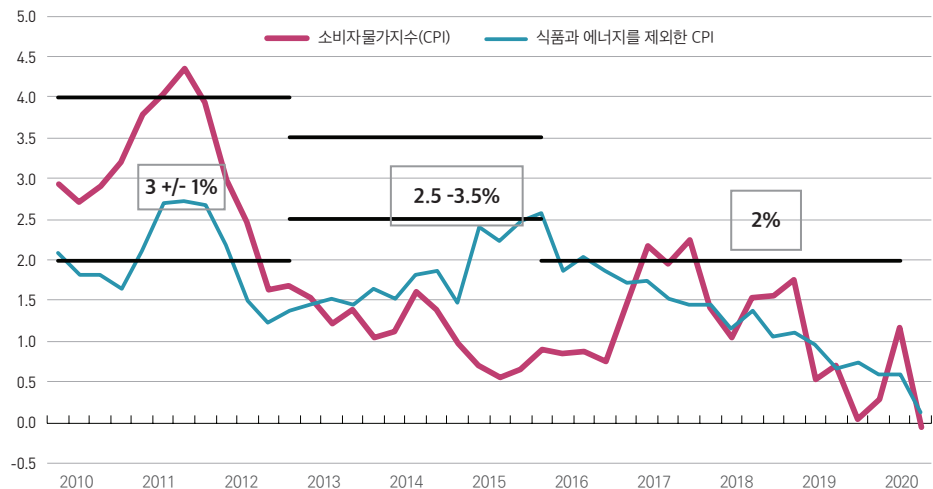


자료: OECD(2020), OECD Economic Surveys Korea, Figure 1.8(pp.23)

코로나19 사태 이후, 물가상승률이 목표치(2%)를 밑돌면서, 한국은행은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75bp 인하하는 등 광범위한 유동성 공급 및 금융시장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다만, 낮은 물가상승률과 저조한 경제 활동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두 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하하여 추가적인 인하 여력이 없는 만큼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수단(양적 완화, 장기국채를 담보로 한 화폐 발행 등)을 권고했다.

그림 3.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



주: 네모 칸 안의 수치는 중기 소비자물가상승률 목표

자료: OECD(2020), OECD Economic Surveys Korea, Figure 1.6(pp.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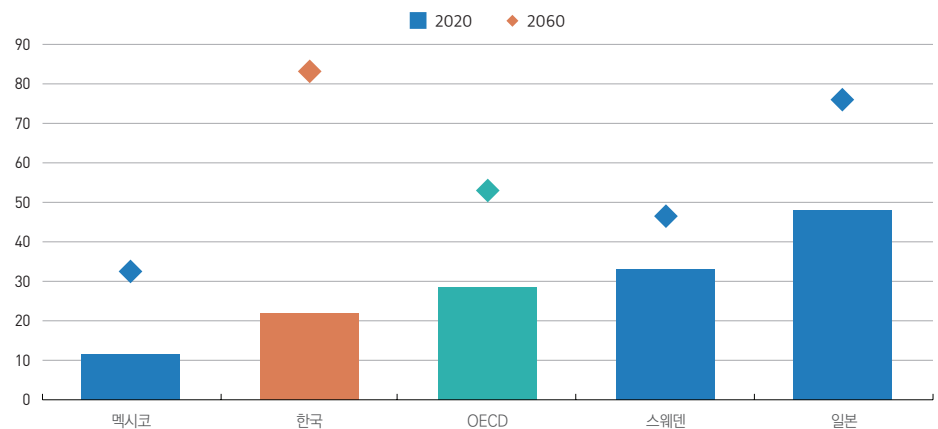


고령화 추세를 반영한 고용 증대 및 양질의 제공

한국은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2060년이 되면,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80%를 초과할 것이며,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한국의 1인당 GDP 성장률은 2005~2020년 평균 3%에서 2020~2060년 평균 1.2%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인적자본 활용 및 생산성 제고를 통해 1인당 GDP 성장률을 1%p에서 거의 2%p 정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그림 4. 2060년 노인부양비

(단위: %)



주: 15~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 OECD는 비가중평균

자료: OECD(2020), OECD Economic Surveys Korea, Figure 4(pp.12)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정규직 중심의 고용 감소 등으로 잠재성장률 저하, 재정부담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OECD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여성·고령·청년층 고용률 및 일자리 질 제고를 통하여 고용을 증대할 수 있다.

첫째로, 숙련도가 높은 한국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고 고용의 질을 제고하는 데 있다. 여성의 경우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 코로나19 등 위기에 취약하며, 경력단절과 연공서열제 등으로 30세 이후 고용률이 저조하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기간 확대 또는 소득대체율 제고와 남성 육아휴직 확대를 권고했다. 또한, 공공어린이집 확대 등 공공보육 품질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둘째로, 고령층의 경우 낮은 연금 수급액 탓에 고령층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일자리 질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OECD는 빈곤층 중심으로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권고하였고, 고령 근로자에 대한 재교육 등 직업 훈련을 강화함으로써 오래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청년의 경우, 고용시장 진입 촉진을 위하여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

센터(진로상담)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포용성 증대를 위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해 나가면서,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및 징수 강화, 근로빈곤 완화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생산성 및 삶의 질(Well-Being) 향상을 위한 기술 확산

과거 코로나19 이전에는 전통적인 사업기반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도구였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신기술에 기반을 둔 서비스 산업이 일반 시민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사태 기간에 한시적으로 허용된 원격의료는 환자와 의사 모두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한국은 첨단 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AI·원격 서비스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기여한 부분을 높게 평가받았다. 한국 정부는 디지털 기술 확산을 통해 종래 기술과 신기술을 활발히 융합하여 경기를 부양한다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OECD 주요 권고 사항과 한국 정부 정책 방향은 서로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OECD는 우수한 디지털 인프라와 높은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5G 서비스 세계 최초 도입 등 ICT 분야 생산성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하였으나, ICT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 ① 스마트 공장을 통한 제품 다양화, 리쇼어링 촉진 등으로 중소제조기업의 생산성 제고 가능
- ② 디지털 기반의 '제조업의 서비스업화'를 통해 생산성 제고 가능
- ③ 디지털 기술 기반의 플랫폼, 온라인 거래 등도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에 기여

지난 20여 년간 한국은 모바일기기, 반도체, 가전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달성하는 등 ICT 기술에서 가장 앞서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새로운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는 다소 뒤처져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숙련 근로자 및 관리자의 채용과 인력 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중소기업 간 및 근로자 간 디지털 격차로 인해 기술확산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디지털 기술 적용·확산을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하고, 세대 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교사 또는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ICT 관련 교육·훈련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R&D 지원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제공 및 대·중소기업·학계 등을 통해 ICT 활용 촉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추가로 디지털 기술 확산을 위해 온라인 보안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다.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 핵심 정책권고 사항



1

코로나19 영향 완화를 위한 거시경제 정책

-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정부는 가계·기업 지원을 지속하고, 추가적인 소득 지원 시에는 저소득층에 집중
- 장기적인 재정운용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되, 건전한 재정을 기반으로 추가 경기부양 여력이 있는 만큼 성장률을 제고하는 투자를 지원할 필요(특히, 5G·인공지능 등 디지털 부문)
-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유동성 지원을 넘어 비전통적 수단도 고려
-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및 차량 배기가스 기준을 강화하고, CO₂ 배출권 가격을 점차 인상해나갈 필요



2

코로나19와 고령화에 대비한 고용 증대 및 일자리 질 향상

- 고용지원서비스·교육훈련 투자를 확대하여 구직지원 강화
- 향후 정년을 연장한다는 목표하에,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임금 유연성 확대 등 인센티브 확대
- 「한국판 뉴딜」에서 제시한 상병수당 제도 도입 시, 근로자의 재할과 일자리 복귀 지원에 부합하도록 설계
-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 등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보험 가입 준수 유도
- 절대 빈곤 고령층을 중심으로 기초연금 추가 인상하고, 뉴딜에서 제시한대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 기준을 완화
- 성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정기적인 국가 차원의 분석 필요



3

코로나19 충격 극복과 생산성·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혁신 촉진

- 규제샌드박스 활용을 확대하여 규제를 완화·개선
-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담보되는 한도 내에서 비대면의료를 활성화
- 중소기업 보조금 지급 시 성장·혁신·생산성 제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R&D 및 신기술 도입 잠재력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혁신바우처 제공
- 중소기업 근로자 및 고령층 대상 ICT 교육훈련을 강화

정부는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한 바 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이 뉴딜사업 10대 과제 중 첫 번째가 데이터 댐 건설이고, 데이터 댐 건설의 1차 과제가 공공데이터의 전면 개방이다.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에서 생성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를 말한다.

이번 호에서는 공공데이터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이현중 본부장과 정부의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예금보험공사 장지웅 차장을 만나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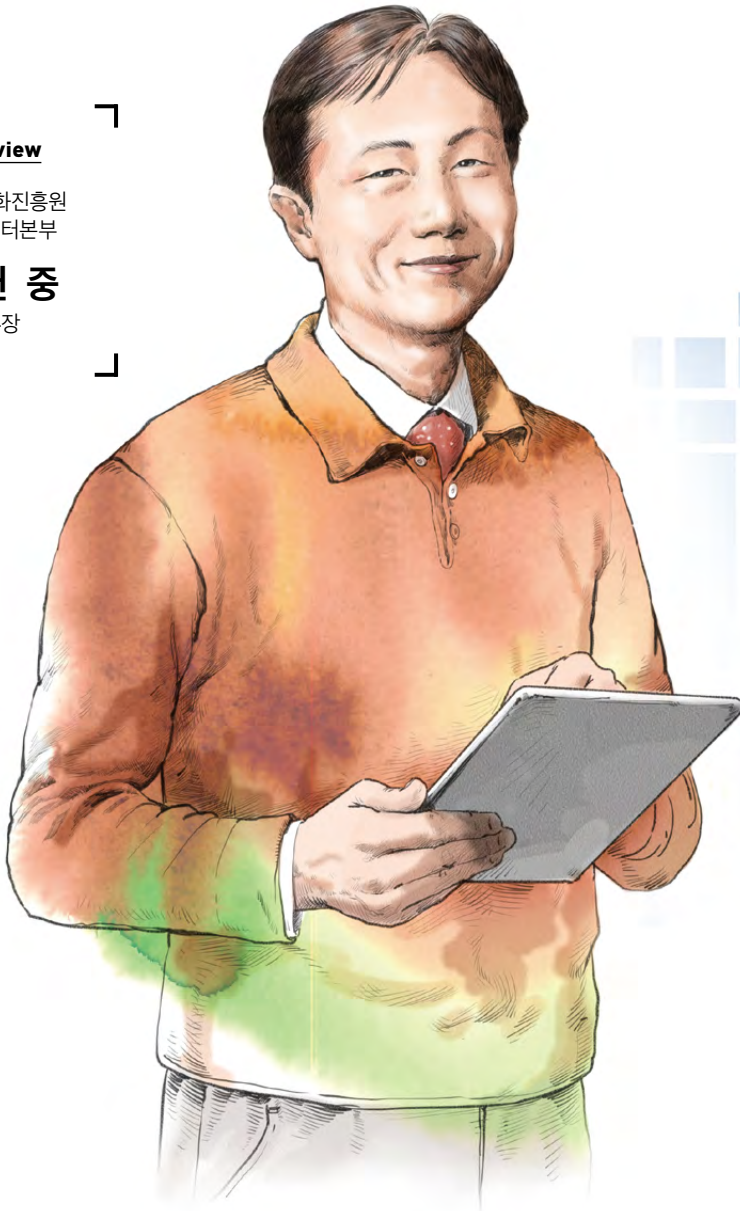
담당: 김상기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sgkim@kpfis.or.kr) 글: 정재림 일러스트: 강태이

*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면 인터뷰로 진행하였습니다.

Interview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데이터본부

이 현 중
본부장





데이터 강국의 기반을 다지는 공공데이터포털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데이터본부(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정책 및 제도 조사·연구, 관련 통계 조사·분석, 공공데이터 가공 등 관리 지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지원, 공공데이터포털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민간을 위한 공공데이터

최근 공공데이터는 디지털 뉴딜의 대표 과제인 ‘데이터 댐’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공공데이터를 민간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했다.

“2009년 한 고등학생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버스 운행 데이터로 ‘버스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울버스’ 앱을 만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정부가 생산·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민간이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저작권 등의 이유로 데이터 활용을 중단시켰습니다. 하지만 많은 앱 이용자들이 민원을 제기한 끝에 중단 2일 만에 ‘서울버스’ 앱은 서비스를 재개했습니다.”

공공데이터의 파급력을 인식하게 된 해프닝이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국정 운영의 주요 패러다임으로 공공데이터를 적극 공유하여 창업을 활성화하

고, 투명성 있는 정부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공공데이터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3년에 「공공데이터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전문 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에 공공데이터본부(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를 설립했고,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편의성을 높인 공공데이터포털 개편

공공데이터포털은 올해 4월에 새롭게 개편되었다. 개편사항은 이용자가 공공데이터 검색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원하는 정보를 더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하는 데 집중했다.

“메인화면을 데이터 검색에 최적화된 검색형 포털로 바꾸었습니다. 오픈소스(Open Source)¹를 기반

¹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OSS라고도 한다. 소프트웨어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코드를 인터넷 등을 통해 무상으로 공개하여 누구나 그 소프트웨어를 개량하고, 이것을 재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개편된 공공데이터포털은
이용자가 직접 분석하고 시각화할 수
있는 기능을 정비했습니다.**



으로 폭넓은 검색과 검색 결과의 정확성도 높였습니다. 그리고 포털에 등록된 모든 데이터를 맵(Map)으로 구현하여 데이터의 소재지와 연관정보를 제공하는 ‘국가데이터맵 서비스’도 개선했습니다.”

국가데이터맵 서비스를 이용해 ‘코로나’를 검색하면 연관정보인 ‘질병관리본부’, ‘바이러스’, ‘감염증’ 등 연관 공공데이터도 검색 결과로 제공받게 된다.

“개편된 공공데이터포털은 이용자가 직접 분석하고 시각화할 수 있는 기능을 정비했습니다. 공공데이터 시각화, 분석서비스, 국민참여지도, 위치정보 시각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포털을 반응형 웹으로 디자인하여 스마트폰 등의 다양한 단말기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했고, 네이버·카카오 등의 아이디로도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게 됐다. 만일 이용자에게 필요한 데이터가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으나 제공되지 않을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신청’도 할 수 있다.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제공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안내해야 하고, 공공데이터 제공을 결정했을 때는 지체 없이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되면 복잡한 행정소송 없이 간단한 분쟁 조정 절차로 국민이 데이터 이용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위원회’도 운영 중이다.

공공데이터포털 서비스의 발전 방향

“최근에 포털에 등록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사회적 재난 이슈를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공적 마스크 판매처와 판매량에 대한 정보를 민·관이 협력하여 앱 서비스로 제공한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마스크 구매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공적마스크 판매정보 서비스는 마스크 구매를 위한 긴 줄을 서거나 문의 전화를 하는 등의 이용 불편을 해소했고, 공적마스크 공급과 수요를 안정시키는 결과를 불러왔다. 이 같은 공공데이터의 긍정적인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고품질 데이터의 확충이 필요하다.

“공공데이터의 품질 저하 요인은 데이터 표준 불일치, 현행화 미흡, 오류 방지대책 부재, 데이터 누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는 기관 간 연계성이 높아 오류가 유입되면 기관 전체 데이터가 오염되기에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수준 평가를 시행하여 기관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을 개선해나가고 있다. 이현중 본부장은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원하는 데이터 개방 및 융합 활성화’라고 설명했다.

“올해는 제3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시작하는 첫해로 고품질의 데이터를 개방하고 연계·활용을 촉진해 데이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고, 데이터 관련 기업과 매칭을 지원하며, 공공 빅데이터 청년 인턴십 사업 확대 등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금자를 보호하는 예금보험공사의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활발하게
공공데이터 공개가 이뤄지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또한 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공데이터를 발굴·개방해
정부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Interview

예금보험공사
정보보호실

장 지 응
차장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하는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 지급을 보장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예금 대지급을 위한 예금보험기금 조달, 금융회사 경영 분석을 통한 경영 부실 조기 확인 및 대응, 부실 금융회사 정리, 예금보험금 지급, 지원자금 회수, 부실 책임자에 대한 조사 및 책임추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 정보보호실에서는 공사의 개인 정보보호 및 IT 보안 관련 업무와 함께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정보보호실 장지웅 차장은 개인정보보호와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맡아 주요 정보들의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는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부보금융회사의 목록과 파산금융회사의 현황, 파산금융회사 매물현황, 부보금융회사 경영현황, 저축은행 재무현황, 보호대상 금융상품 등이다. 기금/보험, 정리, 리스크 관리, 회수, 관리지원 등 5개의 분야의 공공데이터는 총 32종에 달한다.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노력

예금보험공사에서 제공한 공공데이터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서 ‘예금보험공사’를 검색해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의 [예금보험공사] > [정보공개] > [데이터 개방목록]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공공데이터는 파일데이터와 오픈API²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파일데이터 형식은 포털에서 별도의 로그인 없이 바로 다운로드 사용할 수 있고, 오픈API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데이터이며 회원가입과 로그인 후 활용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픈API는 스마트폰 앱이나 PC 프로그램 등으로 개발하는 데 용이한 자료 형태입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에 참고할 수 있도록 16개의 서비스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서비스 구현 예제도 제공한다. 만일 필요한 공공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았다면,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공공데이터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의 [데이터요청] >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메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공공데이터는 정보제공만큼이나 정보보호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개방될 공공데이터를 선정할 때부터 개인정보나 비밀자료 등이 노출되지는 않는지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며, 데이터를 게시할 때도 공사 담당자와 공공데이터포털 담당자가 이중으로 검토·승인하고 있습니다.”

²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말하며, 개발자에게 응용 소프트웨어나 웹 서비스에 프로그래밍적인 권한을 제공한다.

³ 특정 문서작성 소프트웨어 등에 종속되지 않는 CSV, XML, 오픈API 등의 공개된 파일 형식이다.



무엇보다도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 정보를 발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설문조사와 인터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수요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파악하고, 내부적으로는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각 부서에서 신규 공공데이터를 발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공공데이터의 개방 확대와 품질 개선을 위해 갖은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매년 신규 개방항목을 발굴해 연간 개방계획을 수립하여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의 담당기관과 잠재 수요자들에게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공공데이터 사용자에게 더욱 친화적인 형태로 개선하고 있다.

공공데이터의 활용도 개선을 위해 오픈포맷³ 형태의 개방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장지웅 차장은 공공데이터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상의 표준에 맞추어 파일데이터 형식 및 내용의 일제 정비를 추진해나가고 있다.

“공공데이터는 개방형 데이터라는 특성상 정확한 사용처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2019년에 공매자산 정보를 중심으로 관련 업체들에 대한 인터뷰와 홍보를 실시한 결과 관련 업체 1곳에서 제공 중인 서비스에 공사의 공매정보를 실제로 활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예금보험공사 공공데이터의 최근 3년간(2017~2019년) 데이터 다운로드 및 오픈API 호출 합산건수는 총 3만여 건에 이른다. 매년 이용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데이터 경제 가속화에 힘을 싣는 공공데이터

정부는 디지털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데이터 경제 가속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예금보험공사는 데이터 경제 가속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민간 수요가 많은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발굴·개선하고, 이러한 공공데이터가 실제로 민간서비스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 정보를 발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설문조사와 인터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수요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파악하고, 내부적으로는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각 부서에서 신규 공공데이터를 발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지웅 차장은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해서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의 협조가 중요한 만큼, 공공데이터 개방·관리, 아이디어 제출 등의 활동을 부서평가에 반영하여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올해 예정되어 있는 신규 공공데이터 개방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공공데이터 업무가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목표라며 포부를 내비쳤다.

중앙정부의 재정 규모는 얼마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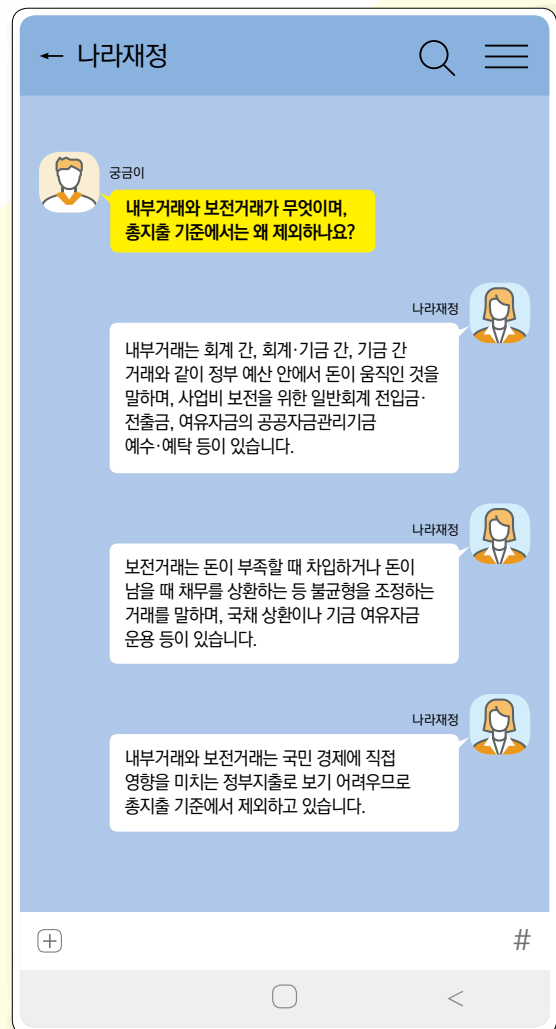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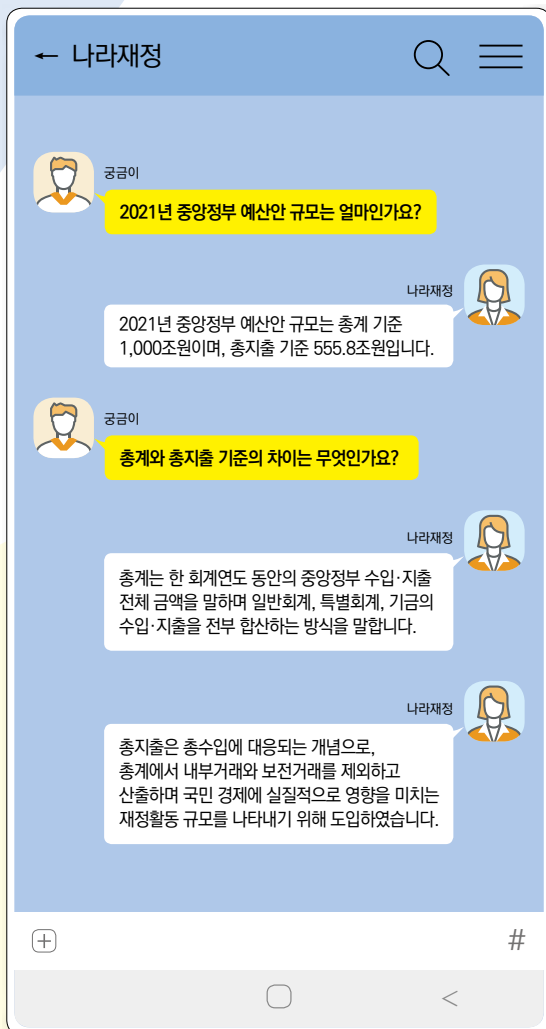
조현희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hyunheecho@kpfis.or.kr)

정부는 경기회복 건인, 한국판 뉴딜 뒷받침,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2021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확장적 재정기조 하에서 전략적 자원 배분과 함께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협업예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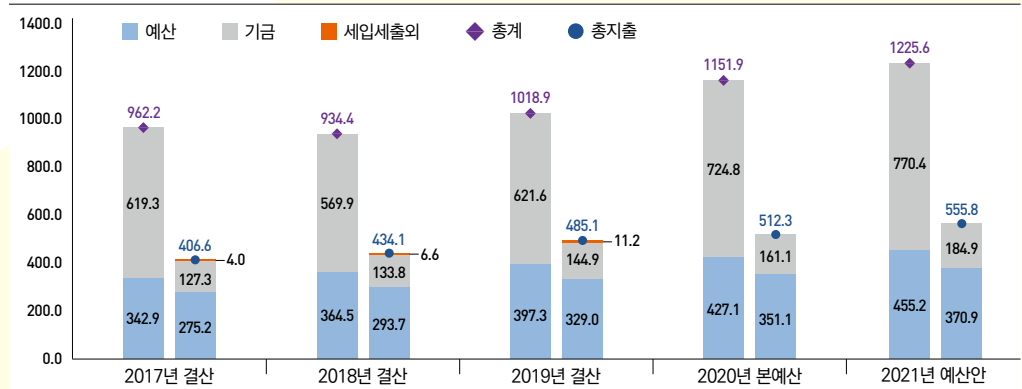
재정혁신을 추진하며 총지출 기준 전년 대비 8.5% 증가한 555.8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중앙정부의 재정 규모를 나타내는 방식들과 그에 따른 각각의 규모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도별 중앙재정 규모 추이

(단위: 조원)



자료: 각 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0 나라살림 예산개요, 2021년도 예산안을 재구성

지난 9월 1일, 정부는 코로나 극복,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555.8조원 규모의 2021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공개한 2021년도 예산안이나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어디에서도 555.8조원이라는 숫자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예산안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총계 규모를,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기금 수입·지출계획안의 총계 규모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 숫자들의 합은 무려 1,000조가 넘습니다. 555.8조원과 1,225.6조원 중 무엇이 중앙정부의 재정 규모를 정확히 나타내고 있는 숫자일까요?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계 기준의 재정 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규모의 합을 말합니다. 총계에는 국민 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수입과 지출 외에도 내부거래¹나 보전거래²가

중복으로 계산되어, 실제 재정 규모보다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 경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재정활동 규모를 나타내기 위해 총수입·총지출 기준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수입·총지출 기준은 2005년 도입한 개념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등에서 중앙정부 재정지출의 주요 작성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하여 산출합니다³.

총수입 = 일반회계 수입 + 특별회계 수입 + 기금 수입 - 내부거래 - 보전거래
총지출 = 일반회계 지출 + 특별회계 지출 + 기금 지출 - 내부거래 - 보전거래

즉, 2021년 중앙정부의 예산안 규모는 총계 기준 1,225.6조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 455.2조원, 기금 770.4조원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총지출 기준으로는 555.8조원(전년 대비 8.5% 증가)이며, 이 중 예산은 370.9조원, 기금은 184.9조원입니다.

¹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기금 간 거래를 의미하며, 사업비 보전을 위한 전입·전출,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수·예탁하는 것을 말한다.

² 회계 또는 기금의 민간차입 상환(국채상환), 남은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기금 여유자금 운용)하는 것 등을 말한다.

³ 금융성기금(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진흥원보증기금 등 8개 기금)과 외국환평형기금의 지출은 재정활동이 아닌 금융활동으로 보아 정부 부문의 순수한 '재정활동 규모'를 의미하는 총지출 규모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재정 STORY

미술관에 간 경제학자

윌리엄 터너의 전함(戰艦) 테메레르, 그리고 산업혁명의 도래

글. 최병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경제학자의 미술관』 저자



Joseph Mallord William Turner, <The Fighting Temeraire>, 1838, Oil on Canvas, 91 × 122cm, National Gallery, London

조셉 말로드 윌리엄 터너(Joseph Mallord William Turner, 1775~1851)가 그린 <전함 테메레르(The Fighting Temeraire)>는 흥미롭게도 007 영화에 등장한다. 샘 멘데스(Sam Mendes) 감독이 처음으로 맡은 007 시리즈 23번째 작품인 <007 스카이폴(Skyfall)>의 처음 부분에 런던의 국립미술관(National Gallery)의 장면이 나오는데 유독 한 그림 앞에 앉아서 그림을 응시하고 있는 제임스 본드의 모습이 보인다. 이 그림이 바로 터너의 <전함 테메레르>다. 잠시 후 그는 접선을 위해 MI6에서 나온 젊은 정보원 Q와 만난다. 두 사람은 터너의 그림을 바라보며 묘한 신경전을 벌인다. Q는 한때 대단했던 전함도 쓸쓸히 퇴역하는 걸 보니 시간은 피해갈 수 없는 것 같다고 말한다. 이는 이제 한물간 본드를 겨냥한 말이다. 그리고 자신은 작지만 힘 있는 증기선에 비유하면서… 본드는 이에 “빌어먹을 큰 배(Bloody Big Ship)”라며 그 전함에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처지를 한탄한다.

윌리엄 터너는 별로 걸출한 화가를 배출하지 못한 영국이 가장 자랑하는 국민화가라고 할 수 있다. 젊고 재능 있는 화가한테 수여하는 특별 예술상을 그의 이름을 따서 터너상(Turner Prize)이라고 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는 영국 낭만주의 풍경화의 거장일 뿐만 아니라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풍경화가로 평가된다. 터너는 일찍이 왕립미술원에서 수학하였는데, 그의 작품은 빛과 색채에 의한 표현주의적인 기법을 사용하며 빛의 묘사에 집중하여 웅장한 풍경의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바다를 표현한 작품이 뛰어난 화가다.

윌리엄 터너의 진정한 인상주의적 스케치들은 당시에 거의 전례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여행하면서 얻은 체험과 눈으로 본 풍경으로 아름답고 경이로운 대자연의 장엄함과 그 속의 인간의 모습을 독특한 그만의 화풍으로 표현하였고, 특히 자연의 빛과 대기 모습을 포착하여 신비한 빛의 변화와 대기의 움직임을 캔버스 속에 매우 사실적으로 형상화했다. 런던에서 터너의 작품들을 본 파리의 인상파 화가 클로드 모네(Claude Monet)와 피사로

(Camille Pissarro)는 큰 흥미를 느꼈다. 영국에 체류했던 모네는 터너가 그려낸 날씨와 풍경을 보면서 그가 사용한 빛과 색채 기법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터너의 새로운 화풍을 접한 모네가 그를 흠모하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터너의 많은 풍경화 중에서 유독 눈길을 끄는 것이 황혼 무렵의 바다를 배경으로 거대한 범선을 이끌고 가는 작고 검은 증기선을 그린 <전함 테메레르>다. <전함 테메레르>는 1995년 영국 BBC에서 '영국이 소장하고 있는 가장 위대한 그림 1위'에 선정되었다. 1838년에 그린 이 그림의 원래 제목은 '해체를 위해서 최후의 정박지로 이끌려가는 전함 테메레르'다. 이 전함은 1805년 트라팔가(Trafalgar) 해전에서 나폴레옹과 스페인의 연합함대를 격파할 때 혁혁한 위용을 보여주었지만 이제는 구(舊)시대의 유물이 된 것이다.

터너는 두 배, 즉 전함과 증기선을 낭만주의적인 수법으로 화폭에 담았다. 붉은 저녁놀의 바다에 떠 있는 거대한 범선은 과거의 영화(榮華)를 뒤로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는 피할 수 없는 전함의 숙명(宿命)을 상징하고 있고, 예인해 가는 검은 증기선은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바탕으로 한 근대문명 시대의 서막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시대는 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그의 작품을 통해 고스란히 읽힌다. 마치 시대의 황혼을 빛으로 표현한 것 같다.

새로운 시대란 혁신적인 기계의 발명으로 생산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시대이며, 또한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이행을 지칭하는 것이다. 사실 산업혁명이란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엽까지 약 60여 년에 걸쳐 영국에서 시작된 생산기술의 발전과 이로 인한 경제, 사회적 변화를 의미한다. 이런 기술적인 변화가 사회구조마저 새로운 경제사회로 급격하게 이행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혁명'이라는 용어를 붙이게 되었다.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은 프리드리히 엥겔스(Friedrich Engels)가 '영국의 노동계급의 조건'이라는 논문에서 처음 사용했는데 이후 영국의 사학자 아

과거의 시대는 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이
터너의 작품을 통해 고스란히 읽힌다.
마치 시대의 황혼을 빛으로 표현한 것 같다.



놀드 토인비(Arnold Toynbee)가 1884년 ‘18세기 영국에서의 산업혁명 강의(Lectures on the Industrial Revolution of the 18th Century in England)’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 널리 퍼지게 된 개념이다.

산업혁명은 생산과정뿐만 아니라 경제구조의 혁명적인 변화를 초래하였고 정치적인 면에서도 왕정의 지배체제가 무너지고 신흥 부르주아 세력은 자본을 축적하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넓혀갔다. 이러한 정치 경제적인 변혁을 계기로 영국은 점차 자유주의 경제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또한 농업 부분이 해체되면서 많은 농민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이농(離農)현상이 괄목할만한 사회현상이 되고 도시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도시에서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집단 거주지역이 확대되고 빈부의 격차도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산업혁명의 여파로 공업화를 겪는 대부분의 사회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영화 <미스터 터너(Mr. Turner)>에서도 보여주듯이 윌리엄 터너는 말년에 도시를 떠나 해안가에서 가까운 첼시의 외딴집에서 고독한 은거 생활을 하였다. 그는 조수나 제자도 없이 집주인 여자의 보살핌을 받으며 칩거했고 결국 그곳에서 1851년 고독사로 생을 마감했다. 터너는 죽기 전에 자신이 남긴 1만 9천여 점에 이르는 데생과 수채화, 유화, 스케치를 영국 정부에 기증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런 연고로 현재 런던의 테이트(Tate) 뮤지엄에는 가장 많은 터너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그의 유해는 세인트폴(Saint Paul) 대성당에 안장되었다.



로널드 코스

법 경제 학 의 개 척 자

글.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현재 자유주의연구회 회장

Ronald Coase



103세의 장수한 자유주의자 코스

“경제학과 법이 따로 놓고 있다. 경제학은 법을 바라만 보고 자신의 운동장으로 끌어들여 함께 놀지 못한다. 경제학과 법은 아주 거리가 먼 것이다.”라는 믿음이 팽배한 가운데 그 믿음을 깨고 경제학의 놀이터로 법을 끌어들였던 인물이 있다. 바로 로널드 코스(Ronald Coase, 1910~2013)다. “경제학이 법을 만나다!” 그의 연구결과를 보고 사람들이 외친 한마디였다. 경제학과 법의 만남은 ‘법경제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다. 이 같은 공로로 로널드 코스는 1991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했다. 코스가 학계에 신선한 충격을 준 것은 무엇보다도 ‘외부효과’의 문제이다. 이는 매연을 배출하는 기업이 인근에 사는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현상으로 예를 들 수 있다. 정부가 개입하여 원인자로서 기업에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규제를 가하는 것이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전통경제학의 방식이다. 그러나 103세까지 장수한 코스는 그런 해법을 간섭주의라고 반대했다.

코스의 핵심철학은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환경에 주인(主人)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남용하여 생겨나는 현상이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환경에게 주인을 찾아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해법은 일방적으로 원인자(기업)에게 책임을 돌리는데, 이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이다. 외부효과는 ‘상호적’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애연가는 흡연으로 옆에 있는 금연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과 똑같이 금연자 때문에 애연가가 흡연을 못 하여 괴로우면 이것도 후자가 당하는 외부효과로서 피해라는 뜻이다.

시장을 통한 환경문제의 해법

만약에 주민(住民)에게 환경권(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을, 공장에 오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한다면, 그래서 주민이 환경의 주인이 된다면 조세나 규제를 통한 정부개입이 필요 없다는 것이 코스의 입장이다. 거래비용이 높지 않다면, 기업과 주민 사이에 권리의 거래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공해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코스 정리’로 잘 알려져 있듯이, 거래비용이 높지 않다면 국가가 환경권을 주민에게 허용하든, 혹은 오염을 배출할 권리(오염배출권)를 기업에게 주든 다시 말하면 누가 환경의 주인이 되어도 자원배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러나 거래비용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정부가 주민에게 환경권을, 아니면 기업에게 오염배출권을 부여하느냐에 따라 자원배분이 효율적일 수도,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따라서 누구를 주인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

코스는 상호적으로 외부효과를 발생하는 두 가지 행동(오염배출, 깨끗한 공기의 이용)이 초래하는 전체 경제적인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여 두 행동 가운데 가장 높은 편익을 보장하는 행동을 하는 쪽에게 환경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런 인식은 당시에서는 혁명적 발상이었다. 코스는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평화를 보장하는 시장경제와 법질서의 묘미를 밝히기 위해서 재산권과 법, 조직, 제도 등 종래의 경제학이 다루지 않았던 신천지를 독특한 시각과 통찰력으로 개척했다. 그 신천지가 법경제학이다. 그가 20세기 가장 영향력이 큰 경제학자의 대열에 우뚝 서게 된 것도, 또한 그가 그 분야의 리더로 급부상한 것도 그런 신천지의 개척 덕이다.



오늘날 유명한 오염배출권 거래제의 핵심도 코스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염배출권은 정부(또는 특정 단체나 국제기구)가 특정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정한 후
오염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민간에게 매각하는 방식이다.
이 권리 소유자만이 오염물 배출이 가능하다.
그 권리는 소유자들 사이에서 자발적인 계약을 통해서 매매가 가능하다.



오염배출권 거래 제도는 코스에서 비롯된 것

코스는 경제학과 법이 만난 오염권을 탐구하고, 그 결과를 보급하기 위한 노력에도 인색하지 않았다. 그는 《법경제학 저널》의 편집을 맡으면서 법경제학의 사상을 확립하고 이를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법경제학 저널》은 주로 법집행, 반독점, 환경법 그리고 법경제 일반 등, 경제학자와 법률가들에게 연구 방법과 방향을 제시하는 매우 유명한 저널이다. 코스의 경제사상이 현실 정치에도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는 환경정책이 입증하고 있다.

재산권 설정을 통한 환경정책은 그의 주요 정책 어젠다(Agenda)다. 독일의 루루강, 우퍼강 그리고 엠서강 등 강 유역의 주민들로 구성된 협회에 강물에 대한 집단적 재산권을 부여한 독일제도가 대표적인 예다. 이 제도는 강물을 오염시켜야 할 경우 회원권을 구입하게 하고 강물 정화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게 했다.

연료 소비에 일정률의 세금을 부과하여 깨끗한 대기의 사용자에게 대가를 받아내는 제도, 바닷물이나 강물을 사용하는 기업들로부터 물 사용료를 받는 제도 등, 환경사용료 제도도 코스의 사상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오늘날 유명한 오염배출권 거래제의 핵심도 코스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염배출권은 정부(또는 특정 단체나 국제기구)가 특정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정한 후 오염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민간에게 매각하는 방식이다. 이 권리 소유자만이 오염물 배출이 가능하다. 그 권리는 소유자들 사이에서 자발적인 계약을 통해서 매매가 가능하다.

오늘날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의 규모를 보면 그 제도가 매우 크게 확산되어 가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2005년에 105억 달러였다가 2007년에 600억 달러, 그리고 2009년에 1,437억 달러, 2011년에는 1,760억 달러로 증가일로에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0년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 규모는 3조 5,00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10년 전과 비교할 때 20배나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이와 같이 오늘날 실시되고 있는 정책 어젠다를 보면 코스가 환경정책의 혁명을 일으킨 장본인이라고 말해도 무방하다.

위대한 경제학자들의 대담한 제안

01

- 사상 최악의 불황을 극복하는 12가지 경제 이론

경제를 보는 눈을
길러주는



재정·경제 신간도서

지은이

린다 유

- 옥스퍼드대학교 경제학 연구원이자 런던비즈니스스쿨 경제학과 겸임 교수인 린다 유는 BBC 뉴스의 수석 비즈니스 전문 기자로서 여러 칼럼을 쓰고,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과 세계은행에 조언을 해왔다.

옮긴이 안세민

출판사 청림출판

발간일 2020년 9월 2일

66

우리는 이미 해답을 가지고 있었다!

세계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기존의 경제상식을 뒤엎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 혼란한 상황이다. 우리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세계적인 경제학자 린다 유는 애덤 스미스부터 로버트 솔로까지 경제 성장에 가장 획기적인 도움을 준 12명의 경제사상가의 삶과 사상을 통해 팬데믹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제안한다. 두 번의 세계대전과 1930년대 대공황 등 역사상 큰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등장해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경제학자들의 이론을 통해 우리 눈앞에 다가온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뜻에서다. '코로나 실업'이라는 용어가 생겨날 정도로 개인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일자리 위기 상황, '언택트 산업'의 범람으로 생산의 많은 부분이 기계로 대체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저임금 노동자와 고임금 노동자 사이의 소득격차, 팬데믹 이후 공장이 멈추면서 발생한 생산성 저하와 저성장의 위험성 등 현실과 긴밀하게 연결된 문제들을 위대한 경제학자들의 눈을 통해 미래를 이끌어가는 해결방안으로 삼아 대비해보자.



- 1장 정부가 경제를 재조정해야 하는가?_애덤 스미스
- 2장 무역 적자, 왜 중요한 문제인가?_데이비드 리카도
- 3장 중국은 부유해질 수 있을까?_카를 마르크스
- 4장 불평등을 극복할 방법은 없는가?_앨프리드 마셜
- 5장 우리는 또다시 세계 대공황을 맞이할 위험에 처해 있는가?_어빙 피셔
- 6장 투자를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_존 메이너드 케인스
- 7장 무엇이 혁신을 일으키는가?_조지프 슀페터
- 8장 금융 위기를 극복하는 자본주의의 미래는 무엇인가?_프리드리히 하이에크
- 9장 임금은 왜 오르지 않는가?_조앤 로빈슨
- 10장 오늘날 중앙은행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_밀턴 프리드먼
- 11장 왜 소수의 국가만이 번영하는가?_더글러스 노스
- 12장 저성장이 우리의 미래인가?_로버트 솔로

청소년 인문학 수업 2 - 사회·과학·경제

02

지은이

박정호 외 9명

엮은이 백상경제연구원

출판사 한빛비즈

발간일 2020년 8월 25일

- 이 책은 〈서울경제신문〉의 부설 연구기관인 백상경제연구원과 서울시교육청이 진행하는 인문학 아카데미 ‘고인돌 (고전 인문학이 돌아오다)’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고인돌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10만여 명의 중고등학생과 시민이 수강한 인기 강연 프로그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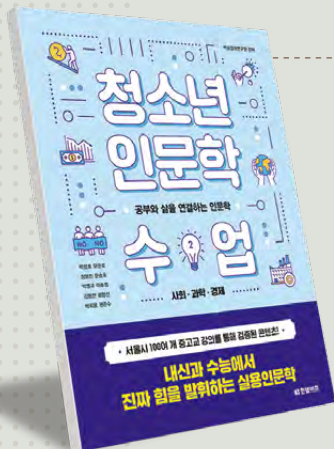
KPFIS's
library

66

공부와 삶을 연결하는 인문학

중고교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의 찬사를 받은 인문학 강의가 책으로 묶여 나왔다. 서울시 100여 개 중고교 특강을 통해 검증된 인문학 콘텐츠를 엮은 이 책은 교과와 진로 탐색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강의를 엄선한 시리즈다. “우리는 왜 공부해야 할까?”에 대한 대답을 주는 책으로 역사, 예술, 문학, 사회, 과학, 경제가 삶과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되는지에 초점을 맞춘 실용인문학서다. 총 2권의 시리즈 중 제2권은 사회, 과학, 경제 분야 콘텐츠를 중심으로 묶었다. “과학이 왜 필요한가?”, “경제를 배워서 어디에 쓰나?” 등의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내용이다. 인문학 강의를 하루 15분씩 5일이면 완독할 수 있는 구성으로 강의 별로 연관 교과목과 핵심키워드는 물론 강의 요약도 제공한다.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 수업과 연계되는 지점도 고려했다.

비대면 수업의 비중이 늘면서 학생 스스로 배움의 폭과 교양의 깊이를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됐다. 이 책은 적당한 분량과 쉬운 설명으로 학생의 관심 분야를 골라 읽으며 학문에 그치는 공부가 아니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도움을 준다.



- 1강 쉽게 풀어보는 경제원리_박정호
- 2강 제4의 물결_오준호
- 3강 '지구'라는 터전_장형진
- 4강 노동인권: 이젠 제 권리입니다_문승호
- 5강 세종의 원칙_박영규
- 6강 비난과 이해 사이_이효정
- 7강 명의열전_김형찬
- 8강 생태계에서 배우는 삶의 원리_최형선
- 9강 시간과 공간으로 풀어낸 서울 건축문화사_박희용
- 10강 뇌로 인간을 보다_권준수

Financial Calendar

9月

September



재정

2021년 예산안 제출(정부→국회)
2021년 국유재산종합계획 제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경제

한국은행 2/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국제

OECD 중간경제전망
(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January

01

- 재정**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 경제** 통계청 2019년 연간 고용동향 발표
- 국제** IMF 수정세계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February

02

- 재정** 2019년 총세입·총세출 마감
2019년 결산보고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 경제** 통계청 2019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 발표

March

03

- 재정** 2021년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기획재정부→각 중앙관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 경제** 한국은행 2019년 4/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 국제**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July

07

- 재정**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발 발표

August

08

- 경제** 통계청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발표
통계청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 국제**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September

09

- 재정** 2021년 예산안 제출(정부→국회)
2021년 국유재산종합계획 제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 경제** 한국은행 2/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 국제**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2020

□ 2020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통계청, 8.20.)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27만 2천원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4.8% 증가, 가계지출은 388만 2천원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1.4% 증가하였으며, 처분가능소득은 430만 1천원(전년동분기 대비 6.5% 증가), 흑자액은 138만 9천원(전년동분기 대비 15.5% 증가)으로 나타남

□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집계결과(통계청, 8.28.)

- 2019년 11월 1일 기준, 인구는 5,178만명으로 2018년 대비 15만명(0.3%) 증가하였으며 가구는 2,089만가구로 2018년 대비 39만가구(1.9%) 증가, 주택의 경우 1,813만호로 2018년 대비 49만호(2.8%) 증가

□ 2021년 예산안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정부, 9.1.)

- 정부는 경기회복 견인, 한국판 뉴딜 뒷받침,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2021년 예산안의 기본 방향을 발표하며 확장적 재정기조 하에서 전략적 재원 배분과 함께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협업예산 등의 재정혁신을 추진하며 전년 대비 8.5% 증가한 555.8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정부, 9.10.)

- 정부는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직접적·실질적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4대 패키지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7.8조원 규모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April

04

- 재정** 2019년 결산감사 의뢰 (기획재정부→감사원)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 국제**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 (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발표

May

05

- 재정** 2021년 예산요구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2019년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정부→국회)
2019년 기금운용평가결과 발표
2019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발간
2020년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 경제** 통계청 2019년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통계청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June

06

- 경제** 한국은행 1/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기획재정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 국제** OECD 경제전망보고서 (Economic Outlook) 발표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IMF 수정세계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October

10

- 재정** 국유재산/물품 결산지침 확정
- 국제**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 (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발표

November

11

- 재정** 2021년 예산안 국회 심의·의결
- 경제** 통계청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 국제** OECD 경제전망보고서 (Economic Outlook) 발표

December

12

- 재정** 2021년 예산 확정
- 경제** 기획재정부 2021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한국은행 3/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안전경영추진단 발대식 개최

한국재정정보원은 8월 3일(월)에 안전경영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한국재정정보원의 안전경영추진단은 2019년에 최초 출범하였으며, 올해 사회적 가치추진단 산하기구에서 기관장 직속 조직으로 격상시켰다. 또한 안전경영추진단 인원을 8명에서 17명으로 대폭 확대·개편함으로써, 안전·보건, 예산편성, 산업재해, 정보보호, 코로나19 대응 등 각 분야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전사적으로 조직화하였다. 안전경영추진단은 앞으로 안전활동의 수행·점검·조치·예방 등 지속적인 위험관리 실시의 주체로서 한국재정정보원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국재정정보원, OECD와 친환경 인지예산 화상회의

한국재정정보원은 8월 18일(화), OECD와 화상회의를 통해 각국의 '친환경 인지 예산제도(Green Budgeting)'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이번 화상회의는 재정정보원이 세계의 다양한 인지예산 제도가 각국의 재정시스템(FMIS)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파악하던 중, OECD가 "회원국의 친환경 인지 예산 운영 현황을 공유하겠다"고 요청해 이루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OECD 예산·지출 분야 정책분석 담당자인 Andrew Park은 "OECD 회원국 중 프랑스, 노르웨이, 이탈리아 등 3개국이 친환경 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였거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친환경 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예산서와 결산서에 담도록 하는 제도이며, '탄소감축 인지 예산'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그는 비OECD 국가 중 필리핀, 방글라데시, 네팔 등이 친환경 인지 예산제도를 운영 중이며, 멕시코는 관련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OECD와 정보를 공유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제사회에서 친환경·성별·세대 간 등 다양한 인지 예산제도가 논의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예산사업이 성평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성인지 예산제도'를 2010년에 도입해 시행 중이며, 재정정보원은 우리나라 각 부처의 '성인지 예산' 업무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 사회적경제기업 돕기 '핸드 인 핸드' 캠페인 동참

한국재정정보원은 3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핸드 인 핸드' 소셜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김재훈 원장은 "코로나19와 연이은 태풍 피해로 사회적경제기업을 비롯한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우리 공동체의 작은 관심과 도움을 모아 이번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김용하 국립수목원관리원장의 지명으로 동참하였으며, 김재훈 원장은 다음 참여 주자로 공공기관 지역 활성화 네트워크인 서울혁신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 민병욱 이사장, 대한건설기계안전원 정순귀 이사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 한국보육진흥원 유희정 원장을 지목했다.

한편, 한국재정정보원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성과급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전통시장 구매촉진을 위한 착한 선결제 운동, 장애인 생산품 구매촉진, 사랑의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 등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영상회의시스템 자체 구축

한국재정정보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보안·품질이 향상된 내부 영상회의시스템을 자체 구축하였다. 또한 재택근무자 및 관계기관과의 외부회의의 경우 온-나라 영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고 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코로나19 환경 속에서도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의 업무환경을 구축하고, 출장문화를 지양함으로써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였다. 앞으로도 한국재정정보원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통해 내부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재정정보원, 비대면 해킹메일 모의훈련 서비스 무상제공

한국재정정보원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됨에 따라 보안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사이버위험 대응을 위한 해킹메일 모의훈련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정보원은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협력하여 보안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화상회의 등 비대면 방식으로 훈련을 지원하고 개선 가이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재정정보원 김재훈 원장은 "이번 계기를 통해 해킹메일로 인한 중요 기업정보 유출 및 거래 피해를 예방하고, 중소기업 보안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가재정시스템과 재정경제부문 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정보보안 전문지식과 인력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안전한 경제활동에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비대면 해킹메일 모의훈련 서비스 신청은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에서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내 삶에 플러스가 되는 **나라살림**,
열린재정에서 확인하세요!

열린재정



열린 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이란?

국가재정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소통함으로써,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가치를 창출하는 정보공개 시스템입니다.

열린재정은,
일반 국민을 위한 알기 쉬운 정보,
전문 연구자를 위한 깊이 있는 상세 정보,
내게 맞는 정보를 찾아보는 맞춤형 정보 등
다양한 사용자가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한국재정정보원

애독자 QUIZ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월간 「나라재정」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퀴즈 정답과 함께 평소 재정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을
“재정 Talk Talk”에 질문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애독자 퀴즈 정답 및 다양한 의견 보내주실 곳

【이메일】 narajaejung@kpfis.or.kr

【애독자 퀴즈 정답 응모 기간】 2020. 9. 24. ~ 2020. 10. 12.

문 제

국민 경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재정활동 규모를
나타내기 위해
2005년에 도입한 개념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등에서 주로 활용되는
중앙정부 재정 규모 작성 기준은
무엇일까요?

8월호
애독자퀴즈
당첨자 발표

☆ 퀴즈 정답

민간투자사업

☆ 상품 당첨자

cho*****@hanmail.net
hjk**@kywa.or.kr
bsj***@fipa.or.kr
jag*****@gmail.com
ham***@kakao.com
del***@cau.ac.kr

※ 당첨자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size)
기프트콘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POSTCARD



8월호를 보면서 데이터 뉴딜에 대한 이해가 쏙쏙 되네요.

공공데이터를 민간부문에 제공함으로써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들이 많이 탄생하리라 기대됩니다.

더불어 재정 관련 공공데이터를 담당하는 한국재정정보원 역할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국민이 재정 분야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각을 넓힐 수 있는
재정정보원의 다양한 기획을 기대해봅니다.

cho*****

※ <월간 나라재정>의 개인구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narajaejung@kpfis.or.kr로 메일 주세요.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가 재정의 밝은 내일을 위해
재정정보화를 이끌어갑니다.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Tel 02-6273-0500 Fax 02-6312-8959 www.kpfis.or.kr

